

나와



가족을 위한

Welfare common sense
for me and my family

이용교
도서출판 드림미디어



복지 상식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360가지 이상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해지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달랐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전혀 다르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24에 가입하여 복지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다.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다양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다양한 복지급여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나와 가족이 행복한 복지생활을 누리려면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늙고 병들었을 때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야 복지 국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일자리를 잃기 쉬운 특고·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어린 아동을 돌보면 더 많은 돌봄비용이 들어가기에 정부 지원을 늘렸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생활양식이 바뀌고 물가가 상승하면 복지급여도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높이고 급여액도 인상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겨울철에는 약자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모하였다.

건강해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예

컨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였고, 20세 이상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은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사진 등을 등록할 수도 있다.

치과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아동과 노인은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도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 19 등으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도 중시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주거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 임대차로 사는 임차인은 안정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총량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자부담이 큰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변동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인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민은 주거복지 상식을 높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성장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곧 복지이다. 일을 통해 소득을 벌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을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하고,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지원했다. 일자리는 당사자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열어간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태어난 아동이 부모의 부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부는 출산하면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제

공한다.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100인의 아빠단’을 조직하여 아빠들의 육아 경험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면제하여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교는 수업료 등이 있지만, 고등학생 대부분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개소하는 등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이 자립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이 확충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확대시켰다. 과거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으면 자녀는 받기 어려웠는데, 이제 따로 사는 자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 무자제도가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은둔 청년과 같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충하였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방에서 칩거하는 청년인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수당을 증액하고, 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확충했다.

복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좋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다누리콜센터를 발전시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소득이 낮은 시민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한번 발급받은 사람은 쉽게 충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이 교통비를 아낄 수 있도록 ‘알뜰교통카드’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도 확대시켰다. 여러분, 나와 가족을 위해 복지상식을 활용하여 봅시다.

2023년 3월 1일

이용교 드림

[머리말]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11
가구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1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1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	25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30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35
정부24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0
국민비서 가입자 1500만 명을 넘었다	45

[곡간에서 인심 난다]

기초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49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5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	58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신청한다	62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아졌다	67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72

[건강해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76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81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85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	90
치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95
우리나라 자살률 여전히 높다	100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105
노동자는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	110
겨울철 저체온증 환자 절반이 노인이다	115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120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25
‘내집 마련’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130
보금자리론 최대 0.35% 포인트 내린다	135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꾼다	140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45

[고용보장이 곧 복지이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150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한다	155
직접 일자리 106만 개가 지원된다	160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열어간다]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세요	165
‘100인의 아빠단’이 육아를 함께 한다	169
복권기금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174
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개소했다	178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3

[청년이 자립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올해 청년정책, 이렇게 시행된다	188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한다	193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98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203
자립준비청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8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를 누린다]

한부모가족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13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하세요	218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22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228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233
문화누리카드를 지금 신청하세요	238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된다	243
농어촌 주민의 복지실태를 조사했다	248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540만 964원으로 2022년보다 5.47% 인상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고 1인 가구 인상률은 6.84%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76개 복지사업에 영향을 준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하층, 중위소득의 50%~150%는 중산층으로 간주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복지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았고, 경우에 따라 소득 분위,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쓰였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가구

에 대해 소득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 뿐만 아니라, 소득 정도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도 영향을 받는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022년보다 5.47% 인상한 것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다. 전체 수급자 가구 중 7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6.84% 인상돼 2022년 194만 4812원에서 2023년 207만 7892원으로 오른다. 한편,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5인 가구 633만 688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3.57%)을 토대로 한 ‘기본인상률’에다 1인·2인 가구 지원 강화 및 통계와 현실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1.83%)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추가증가율은 6년간 한시 적용하는데 올해가 3년 차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근거 통계를 과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한 가구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생계급여 수급기준 30%에서 35% 상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도 인상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소득이 1억 원 혹은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매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어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면 그만큼 빼고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은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 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처음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다.

2023년 4인 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216만 386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270만 482원 이하로 정해졌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가구구성원이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그리고 중증장애인만으로 구성되면 의료급여 1종을 받고, 가구구성원 중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

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2종을 받는다. 1종 수급자는 병원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진료는 의원·병원이면 10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면 진료비의 15%를 부담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는 2022년보다 평균 23.3% 올려 연 1회 초등학생 45만 1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을 받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되었기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아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학원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학교에 지원하면 특례로 입학하고, 국가장학금을 연간 700만 원까지 4년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2023년부터 47%까지 확대해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53만 8453원으로 2022년 235만 5697원보다 상향된다. 주거급여(표준임대료)의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서울(1급지) 51만 원, 경기·인천(2급지) 39만 4000원, 광역·세종·특례시(3급지) 31만 3000원, 그외 지역(4급지) 25만 6000원이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표준임대료보다 낮을 수도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선정될 수 있다.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에서 사는 사람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바란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높아지므로 널리 활용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예산이 늘어난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9만 1000명이 늘고,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여기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기조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은 성명을 내고 “원칙에 따른 인상률은 진취적이지만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실제 소득 중위값과의 차이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의 시각에서 복지제도를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022복지권리안내수첩 <http://pps.icomn.net/469711>

가구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

시민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고, ‘가구 소득 인정액’ 등 조건에 맞을 때 받을 수 있다.

가구의 범위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달라진다

정부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복지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교육급여 등을 알아야 한다.

많은 시민은 ‘가구’와 같은 낱말조차 정확히 모른다. ‘가구’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가구가 구성되지 만, 함께 살아도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고, 따로 살아도 가구원인 사람도 있다. 부모와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한 가구이다. 즉,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따로 사는 자녀는 가구원이다.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있어도 군대에 간 자녀는 국방부에서 밥을 주기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조부모와 손자녀 같은 직계 혈족은 함께 살면 가구원이고, 따로 살면 가구원이 아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함께 살아도 가구원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독거노인인데, 주민등록표에 성인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중증장애인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한 달에 15일가량은 최저임금을 벌 것으로 간주된다. 어디에서 사는 지조차 잘 모른 경우에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면 한 달 후에 가구원에서 빼준다. 가구원의 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선정시에 영향을 주기에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전혀 다른 낱말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이 번 모든 소득을 월 단위로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전혀 다른 낱말인데, 많은 사람은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 월 소득을 물으면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대답한다.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맞지만,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도 있다면 맞지 않다. 정부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으로 계산된다. 재산소득은 임대수입이나 예금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이고, 이전소득은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사적이전소득(자녀가 준 용돈) 등을 말한다. 가구 소득은 전체 가

구원이 번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은 세대주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더 많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한다. 어떤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은 350만 원이고, 소득평가액은 260만 원이다.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본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이기에 세대주의 소득만 생각하고, 자녀의 근로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던 신청자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다만 대학생의 근로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월 4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은 7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전체 가구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보고, 재산의 유형마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고, 해당 재산에서 일부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 결정한다. 일반재산은 공제받는 금액이 많고 환산율이 월 4.17%이다. 금융재산은 공제금액이 적고 환산율은 일반재산의 1.5배인 월 6.26%이며, 승용차는 소득환산율이 차량 가격의 월 100%로 지나치게 높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재산에서 6,900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은 4,200만 원, 농어촌 주민은 3,500만 원을 공

제받는다. 어떤 사람에게 7,000만 원의 일반재산이 있다면, 대도시에 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1,700원이고, 중소도시에 살면 1,167,600원, 군 지역에 살면 1,459,500원이다. 다만,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액의 1/4로 평가받는다.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약간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본재산 공제액은 2022년에 35~69백만 원에서 2023년에는 53~99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주거용재산한도액은 52~120백만 원에서 112~172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약, 광주에 사는 사람이 일반재산은 별로 없더라도 은행통장에 7,000만 원이 있다면,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6.26%를 곱하기에 월 4,069,000원의 소득환산액이 생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 가격이 300만 원인 차량을 가진 사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300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승용차를 팔고, 은행 예금을 찾아서 전세·월세 보증금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소득인정액은 제도마다 환산 방식이 다르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복지 제도마다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과거에는 같았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면서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꼼수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받은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생계급여 수급자의 산정방식으로 통일시켰다.

한편,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완전히 다르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월 10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어떤 노인의 근로소득이 월 303만 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으로 재산이 많지 않다면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가 일해 각각 303만 원씩을 번다면 가구소득은 606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 소득평가액은 28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복지급여마다 다르기에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특정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전체 가구원, 거주지역,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모의로 계산된다.

어떤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고자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급여를 받고 싶다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450여 개 복지서비스를 담고 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급여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되어 독자가 복지급여를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정부 부처가 제공하는 약 450여 개 복지사업을 새로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밝혀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규 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것은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이 2세 미만(0~23개월)까지 부모나 보호자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을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기에 이때 영아수당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생후 60일 이전에 신청하면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기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영아수당은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바우처 50만 원(국민행복카드)을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은 영아수당, 보육시설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시설이용 50만 원)을 지원한 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된다.

첫만납이용권 2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 태어난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첫만납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와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부모(주로 어머니)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으로 적립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아동이나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에서 이 카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복지사업은 사업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2021년 만7세 미만에서 2022년에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받지 않았다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많은 복지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여건 변화로 사업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2021년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받지 못했더라도 2022년에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특히,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새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22년에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88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만 원은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의 경우에 103만 원 공제후 추가로 30%를 공제받기에 맞벌이라면 617만4285원일 때이다. 대부

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특정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일단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공무원도 신청한 사람의 복지급여를 챙겨줄 수는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다.

복지서비스 책자를 전자북으로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65.9%)하고,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1인 가구 지원사업(48.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8.0%) 등을 선택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안내 책자에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행정복지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다.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와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바란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www.gov.kr>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생활 필수 지원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200여 개를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수록하였다.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한 이유

해마다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고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이러한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쉽다.

이에 정부는 생활 필수 정책 200여 개를 생애주기별, 분야별로 수록한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담았다. 올해의 공공 일자리, 임대주택 정보 등 최신 정책도 안내했으니, 관심 있는 국민은 꼭 챙겨보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만 8세 미만까지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직접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받아 쓸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영유아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가 많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적지 않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2세 이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이 도입되었고 확산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청년·대학생은 미래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의 대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지원제도는 국가장학금이다. 연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약 1억2천만 원 이하인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700만 원(학기당 35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

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데, 저소득층은 국공립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사립대학교도 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평균 70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고, 장애인은 학점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학비는 근로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취업·창업을 원하는 청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학원비를 충당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해외취업지원을 활용하며,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가족·중장년은 일과 삶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아동을 키우는 것은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한다. 정부는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영아(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급한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은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여성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일을 찾도록 여성워크넷,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어르신은 신나고 건강한 삶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은 고령자 인재은행, 시니어 인턴십 사업,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노인은 일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소득을 얻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건강이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으면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면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은 보건소에 신청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노인의 통장사본과 치매 약값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매달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과 돌보는 가족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고, 치매상담콜센터에 전화하여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다.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소득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받고, 일하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다문화가족은 방문교육 서비스, 공단 근로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사업, 창업점포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사업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국가근

로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귀농·귀촌 정착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등이 있다. 삶의 즐거움을 위한 문화 지원은 숙박할인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나눔 티켓,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전국 문화시설 무료와 할인 서비스 등이 있다. 건강·안전 지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국민비서 서비스 등이 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 책은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전국 (작은)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농협 등 다중 이용기관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책은 정책주간지 ‘공감’ 누리집을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 <https://gonggam.korea.kr>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한 번만 등록해두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크게 확대된다.

복지멤버십 제도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복지멤버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한 국민 대상으로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2021년 9월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됐다. 2022년 8월 말 기준 944만 명(637만 가구)이 가입했고, 이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을 받은 가구는 약 65만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복지멤버십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과거에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찾아서 신청해야 했지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국가로부터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31종에서 최근 장애수당 등 9종이 추가되었다. 희망저축계좌와 장애아동가족지원 등도 반영돼 2023년 1월에는 총 58종으로 늘어난다.

가입한 사람만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당사자가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복지멤버십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본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기존 수급자가 아닌 숨겨진 위기 가구의 경우, 개인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열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는 시민이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을 안내하고 가입을 상담해야 한다. 시민이 어떤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같은 조건일 때 관련 복지급여도 함께 받도록 복지멤버십의 가입을 권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수행하기에 복지멤버십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의 전 국민 확대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도 좀 더 촘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정보를 단전, 단수, 통신비 체납 등 기존 34종에서 5종 더 추가하기로 했다. 암이나 중증 질환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장기간 병원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새로 받는 경우 등의 정보가 새로 연계된다.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2022년 10월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를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 종류가 기존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수당)에서 6개(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급여, 해산급여, 장애수당) 더 추가됐다.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복지로 사각지대를 줄인다

복지서비스·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동력을 얻었다. 2022년 8월 21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빈곤을 줄이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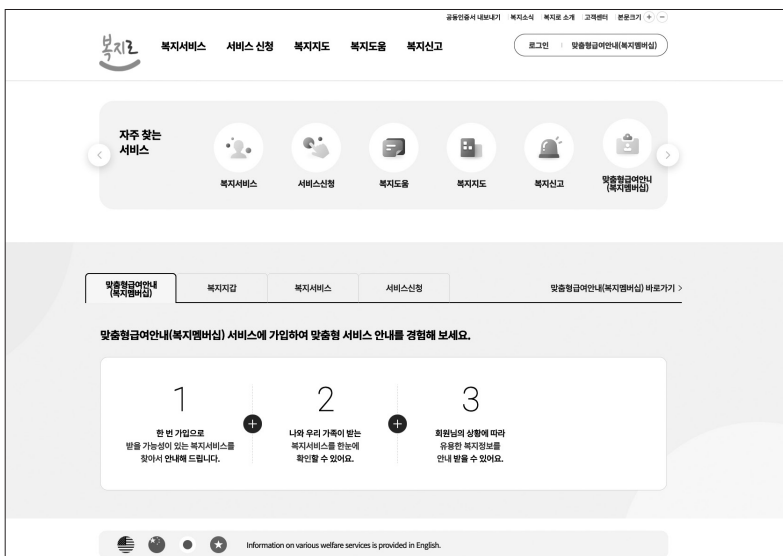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각종 빅데이터로 위기 가구를 감지하더라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공무원 등이 찾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서류 작업을 하느라 여유가 별로 없다.

실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조금 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급여를 받기 어렵다. ‘수원 세 모녀’조차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근로의무를 면제받았을 것이다. 채무가 많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과 받은 ‘금융기관의 채무’만 인정을 받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청했다면 긴급복지의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줄여 빈곤 자체를 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높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복지수급

자의 수와 급여액을 늘릴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로’ 혹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우는 아기 젖 준다”는 속담처럼, 당사자가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정부는 취약계층 등 14만 명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했다. 그중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8000명, 독거노인·장애인 1만 6000명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받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지만,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복지급여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자부터 조사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찾아갈 대상은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복지공무원이 대도시에서 사는 가구는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찾아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어 계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재산이 있더라도 일정액을 공제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되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도입한 맞춤형 급여를 통해 생계급여 및 장애 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 주요 현금급여 3종 중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재산형성이 어렵고 재산이 낮으면 값싼 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정 재산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의 자산을 조사하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과거 생계급여 수급자는 당사자가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연간 가구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재산 9억 원 이상일 때만 부양비를 산정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 가구를 조사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하는 가구는 ‘위기가구’로 분류되는데, 당사자나 주변 사람이 129번으로 신청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119번으로 전화할 줄 아는 사람도, 병원 입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하기 어려울 때 129번으로 전화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병원 입원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거주지 시·군·구 담당 복지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24시간 안에 지원해준다.

위기에 처하면 129번으로 전화한다

실직이나 사업부진, 질병, 사고,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면, 긴급복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공부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복지급여를 신청하는데 익숙하지만, 평소에 복지급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상담하고, 신청서를 쓰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신청해도 선정 여부를 아는데 한 달 가량 걸린다.

그런데, 긴급복지는 전화로 신청해도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위기 가구로 판명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의 1회분이 지급된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지원을 받은 후에 조사를 해서 기준에 넘치더라도 지원 중단으로 종결된다. 의료지원은 한번만 받아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신청해볼만 하다.

129번 전화는 평일 업무시간(평일 9시~18시)에는 상담원과 연결되고,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내용은 야간, 주말, 공휴일인 경우에는 상담예약 및 상담센터 이용시간 관련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1만6000명도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다. 노인은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고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노인을 연간 20만 명으로 추정한다. 그중 10만 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한 ‘거주불명자’이고, 10만 명은 미신청자이다.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은 1인당 월 103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계산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예컨대,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월 303만 원씩이면 가구 소득은 606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280만 원으로,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합본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료실
<p>기별 록지</p> <p>소년편</p> <p>보기</p>	<p>맞춤형 심심기초</p> <p>여! 많은 분들에게</p>	<p>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대상자 재출 시류연형 절차 및 연접신청 사항...</p> <p>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자 재출 공고</p> <p>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률지원,법률평가) 서비스 중단 안내 ["22.12.2...]</p> <p>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휴진 시간 조정에 따른 달변사항...</p> <p>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도조서 안내</p>	<p>2023/01/16</p> <p>2022/12/28</p> <p>2022/12/21</p> <p>2022/11/15</p> <p>2022/09/19</p> <p>이보기</p>

정부24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통합 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등 4종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

정부24는 공공 서비스 9만 여종을 안내한다

정부24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9만 여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있다. 국민은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서비스 찾기·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 사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300여 종은 정부24에서 바로 신청·조회·발급 받을 수 있다.

국민은 정부24에서 실시간으로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정부24를 통해 일반 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의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꿈청소년, 전입신고+, 안심상속, 취업서류 등 7종의 서비스에 신규로 노후생활지원, 장애

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서비스 등 4종이 추가돼 11종(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되었다.

맘편한 임신과 행복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신청하여 임신부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등이다. 모든 임신부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맘편한 KTX 특실 할인, SRT 임신부 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맘편한 KTX 특실 할인은 임신부가 임신 기간이나 출산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일반 요금으로 특실을 이용할 수 있고, SRT 임신부 할인은 요금의 30%까지 할인받는 제도이다.

또한, 소득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받고, 중위소득 180% 이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 배지, 임신부 주차증, 임신 축하선물 등을 제공하므로, 정부24나 해당 자치단체 누리집을 찾아보기 바란다.

행복출산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이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니 해당 자치단체 누리집을 검색하기 바란다.

온종일 돌봄을 받고 청소년은 꿈을 키울 수 있다

온종일돌봄은 초등학교 대상 돌봄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생이 돌봄이 필요하면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중학생도 참가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욕구가 더 강한 사람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꿈청소년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종합상담과 다양한 지원서비스, 지원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상담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청소년은 학업, 진로, 학교폭력, 이성문제 등에 대해 상담받고, 학교·가출·이주배경 청소년 등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직업체험, 건강지원,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등을 받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문화예술,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하여 쓸 수 있다.

전입신고, 상속, 취업서류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대상자가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은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기 바란다.

안심상속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직계비속이 있는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직계비속이 없는 배우자)이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취업 시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직 공무원은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증명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24는 노후생활과 장애인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

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내차관리와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정부24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24에서 거주 지역, 생년월일, 성별, 소득구간, 개인특성, 가구특성만 넣고 검색하면 305가지 보조금의 수급 여부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하는 국민은 지금 가입하고 검색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정부24 <http://www.gov.kr>

국민비서 가입자 1500만 명을 넘었다

국민비서의 가입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국민 5,162만 명 중 29.0%가 사용하는 국민 생활 속 행정비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민비서는 내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알려준다

바쁘게 살다보면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라든지,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국민비서 ‘구뻐’ 알림서비스는 국민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앱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다. 국민비서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 등 내게 필요한 생활정보 27종을 알려주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행정서비스이다.

주요 알림 서비스와 소관 기관을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행정안전부), 교통 과태료, 교통 범칙금(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 교육, 통학버스 교육(도로교통공단),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일반·암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국민비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 예약, 재택치료 등의 유용한 알림도 제공해 오고 있다.

국민비서 마스크트인 ‘구뻘’은 인공지능 로봇이다

국민비서 마스크트인 ‘구뻘’은 전 세계가 연결된 네트워크 세상에 사는 인공지능 토끼 로봇으로, 매우 빠르고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의 비서이다. ‘구뻘’은 국민비서의 줄임말인 ‘국비(國秘)’였다가 ‘비(秘)’가 “비밀”이란 뜻이 있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음하기 좋고, ‘Good+비서’의 의미가 있는 ‘구뻘(Goodpy)’로 정했다고 한다. 즉, ‘구뻘’은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비서”라는 뜻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이 원하는 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목적으로 추진한 국민비서를 2021년 3월에 카카오, 네이버, 토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비서는 정부의 알림을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와 케이비(KB)스타뱅킹, 케이비페이(KB Pay), 신한 쏠(SOL), 신한플레이(pLay),페이코(PAYCO) 등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앱 8종 등을 활용하여 제공해 준다.

24시간 언제나 채팅로봇으로도 상담해준다

또한, 국민비서는 정부서비스나 민원정보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24시간 언제나 채팅로봇(챗봇)으로도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행정·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전자통관, 정부보조금, 휴양림 예약, 특허 등 23종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뻘’의 대표적인 상담서비스와 소관기관을 보면, 민원사무 안내(행정

안전부),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연휴양림(산림청), 전자
통관(관세청), 지방계약(행정안전부), 형사수사, 사이버 범죄(경찰청), 공
무원연금(공무원연금공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통일부), 공유누리(행
정안전부), 병무(아라)(병무청) 등이다. 실례로 국민 상생 지원금 지급 시
채팅로봇 상담을 통해 정부 콜센터의 업무부담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국민비서는 세금과 보조금 알림도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비서는 지방세 알림, 정부24(보조금24) 알림, 국민연금
안내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다 다양한 알림·고지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국민비서 알림을 받은 후, 바로 행정서비스 상담과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서
비스의 완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별 맞춤형 생활정보
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하면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국민비서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비서 사이트 접속후 ‘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간편인증
실행’을 예시하면, 국민비서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선택
한다, 간편인증 선택 창이 조회되면 인증방법을 선택한다. 이때 본인이 자
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패스, 금융기관 인증서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서비스 이용 등
의 동의에 체크후 ‘인증요청’ 버튼을 선택한다. 서비스 선택시 앱 설치와 회
원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입과 이용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비서에 대한 국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구뎨인 척하면서 속임수 문자(스미싱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범죄도 기승 중이니 휴대폰에 믿을만한 백신을 깔고, 아무 URL이나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흔히 해당 URL를 누르면 “커피이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문자와 URL을 보내는데, 무심코 URL을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털릴 수 있다.

정부도 구뎨인 척하면서 속임수 문자를 보내거나, 개인정보를 빼서 오남용하는 정보통신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수사하여 단죄되기 어렵고, 경제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기에 속임수 문자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수익의 몇 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징역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면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개인정보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도 국민비서와 같은 유익한 정보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에 잠금 장치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민비서 <https://www.ips.go.kr>

기초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28만 명이고 예산은 20조 원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는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고, 노인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다.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정부는 해당 노인이 신청할 때만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당사자(가족 등 대리인)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복지로 등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많은 노인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잘 모른다.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다르다. 해당 노인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월 103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기에 소득평가액은 크게 줄어든다. 즉, 어떤 사람이 매월 203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이다. 이 노인에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으로 180만 원에 미달하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노인이 근로소득은 203만 원이고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을 탄다면 소득인정액은 120만 원(근로소득에서 70만 원+국민연금에서 50만 원)이다. 이 경우도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보다 적기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노인 단독가구는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한 명인 경우이다. 부

부가구는 부부가 모두 노인이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노인 단독가구’이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노인 부부가구’가 된다.

부가구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부부가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이다. 그중 근로소득은 각자의 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산출된다. 어떤 부부가 한 사람은 월 203만 원, 다른 한 사람은 183만 원을 번다면, 소득은 386만 원이고 소득평가액은 126만 원(70만 원+56만 원)이다. 이 부부가 소득인정액의 산출액을 잘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산출된다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많은 노인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잘 모른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액수까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노인 단독가구는 해당 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만 계산하고, 노인 부부가구도 해당 부부의 이름으로 된 재산만 계산한다.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또한,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중에서 일정한 금액은 공제받고, 부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

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부채를 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금액을 합쳐 월 4%를 곱해 계산된다.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text{일반재산}-1\text{억}3,500\text{만 원})+(\text{금융재산}-2000\text{만 원})-\text{부채})+(\text{고급승용차}+\text{회원권})]\times 0.04\div 12$ 로 계산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180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려면, 일반재산이 6억 7500만 원이어야 한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은 재산이 6억 7500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시가 7억 원인 주택에서 살더라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재산가액은 '공부상 확인된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흔히 공부상 확인된 재산은 실제 거래가보다는 낮게 평가된다. 주택에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 낀 경우가 많기에 실제 거래가액에서 대출금액을 빼고, 공부상 가격으로 산정하면 상당한 재산을 가진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288만 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려면, 일반재산이 9억 9900만 원이어야 한다. 실거래가 13억 원 아파트(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에서 살더라도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작년이 떨어졌더라도 올해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일 년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탈락된 사람은 새로 신청하기 바란다. 2022년에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180만 원으로 2021

년보다 11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2021년보다 17.6만 원이 인상되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도 103만 원으로 2021년보다 5만 원이 인상되었기에 경제선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단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에게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도록 하여 제도가 바뀌면 안내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된 사람은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정보를 받기 어렵다.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직전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만 원이고 부부가구 323.2만 원이며, 월 최고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2만 3180원이고 부부가구 51만 7080원이며, 수급자는 2022년 628만 명에서 2023년 665만 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을 대상이어도 새 대상자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과거에 받았지만, 5차 지원금의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쿼터서비스기사 등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021년 12월~2022년 1월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수급자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개인용컴퓨터(PC)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 방문신청은 해당되는 사람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계좌를 알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이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된 만큼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과거에 받았던 사람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본인이 수령거부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 50만 원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된다.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이 지원금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여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려면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새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도 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는 새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이들이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은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감소요건이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이다.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즉, 증빙서류는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이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는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고,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감소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이다. 해당 월의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고 연간소득 증빙자료만 있다면 12로 나누면 된다. 증빙서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날짜가 다르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지급된다. 새로 신청한 사람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 원이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기 바란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해당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하기 바란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 휴가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또는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 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휴직’은 일정기간동안 쓸 수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무급’이란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 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휴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최초 시행될 때 5만 건을 넘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모두 5만977건에 달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으로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정부는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정부는 2022년에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였다.

가족돌봄비용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해당자가 조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바꾸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용자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전한 휴가’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가 출산전후휴가처럼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바꾸고, 해당되는 사람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가 일·생활을 보다 균형있게 누릴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처럼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의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도 활용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신청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한다. 해당되는 국민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선별 지급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되어도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가구 소득은 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

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여부를 해당 가구원이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정한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년층에게 유리하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단위로 합산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고, 이것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코로나19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본인이 반씩 내는데,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예컨대, 가구원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 3명이고, 그중 아버지는 지역 가입자이고 어머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두 사람의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할 때에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지만(격리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때에는 확진·격리자수에 따라 지급된다. 즉, 3인 가구 중 1인이 확진·격리자면 10만 원, 2인 이상이 확진·격리자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여부와 소득에 따라 매달 달라진다. 정규직으로 소득이 일정한 사람은 건강보험료도 일정하지만, 비정규직으로 매월 소득에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한다. 건강보험료는 격리된 가구원이 속한 건강보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가족이 아닌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는 7월 18일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24에 회원가입이 된 사람은 로그인하면 되는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먼저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가가 주는 305가지 보조금 사업을 ‘보조금24’에서 검색하고, 그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의 혜택-[확인하세요]탭에서 “(2022.7.11. 이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는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격리정보, 주민등록 세대정보, 세대원 건강보험료, 계좌검증 등)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행정복지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공공기관 비정규직 예외지원대상은 근로계약서·근로시간확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자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원비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하지만, 번거로운 서류 때문에 신청률이 낮아질 것이다.

유급휴가비 지원대상도 축소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 1일에 4.5만 원씩 최대 5일 동안 지원하였다. 그러나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코로나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2년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천 원이었고, 약국

정부24 <http://www.gov.kr>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아졌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일부 상품 만 84세)의 영농종사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간병급여금, 휴업(입원)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재활(고도장해·재해장해)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이 있다. 2022년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일반형의 경우 각각 10만 1400원(1형), 15만 2700원(2형), 12만 3300원(3형)이며, 산재형은 전일보장형과 휴일보장형이 9만 6330원과 1만 5970원이다.

가입 시 보험료의 50%(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지자체와 농협이 40% 내외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보험료의 10% 내외(1만 원 수준)만 낸다.

정부는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한 바 있다. 이 급여는 2021년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 전체 지급건수의 87%를 차지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일반 2·3형)하여 최대 120일까지 지급한다.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었으나, 농업인과 유족이 일시금과 연금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의 5%를 할인해준다

부부나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 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산재·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농업인안전보험에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산재·어선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형 농업인안전보험도 출시되어 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위해 보장을 꾸준히 확대했다. 2018년에는 ‘산재형’ 상품을 출시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 3000만 원 정액보장을 하며,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겸업농을 위한 ‘산재근로자전용 농(임)업인NH안전보험’이 새롭게 출시됐다. 과거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겸업농들도, 이제 이 상품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겸업농의 농작업 패턴에 따라 주중·주말 모두 보장되는 전일보장형과 주말농을 위한 휴일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 법에 따라 국고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율은 크게 늘었다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2021년 기준 전국 농업경제 활동인구의 67.1%인 약 90만 명이 가입했다. 이는 87만 5000여 명이 가입한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대 가입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농민을 지켜줄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는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월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의 보장 기간이 확대됐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30일이었던 보장기간을 60일로 확대하며 보장을 강화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의 보상을 통해 농업경영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보장으로 농기계의 손상, 농기계로 인한 사용자 손상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이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

고이다.

‘2021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농업인 중 농작업 관련 사고로 고령 남성의 손상이 많았다. 농기계의 경우 경운기, 농기구 사고는 사다리가 가장 많았다. 2020년에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4%로, 2019년 2.7%와 비슷했다. 주요 발생 상황으로는 넘어짐이 2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리한 힘·동작 사용 등의 신체 반응 손상(17.1%), 추락사고(15.9%), 충돌 및 접촉 사고(15.3%) 순이었다.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나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중 자부담 분만 납부하고, 보조금은 농협에서 시·군에 청구한다. 보험가입자가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병·의원에서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농협에 청구해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https://www.nhfire.co.kr>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정부는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원대책을 수립·수행하고 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취약계층 집중 보호,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등이다.

정부는 겨울에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생활지원사(3.1만 명)가 노인이 사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로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노숙인·쫓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적극 안내한다. 응급잠자리는 동절기에는 연간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 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위기상황별로 맞춤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긴급복지를 통한 동절기 난방비용 월 10만 7천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본인이나 가족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경우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재산 공제액은 2022년에 35~69백만 원인데 2023년에는 53~99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주거용재산한도액은 52~120백만 원에서 112~172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자리 참여자를 조기 선발하고 임시거처도 제공한다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0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을 통해 연초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2023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퇴거위기에 있는 가구의 임시거처를 지원하고(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2022년, 7천 호)하는 등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총 2천 4백억 원 규모, 2022년 9월부터)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확대(2천억 원→3천억 원)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 원 이하인 자에게 저금리 취업준비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한파 대응과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117.6만 가구(전년 대비 29만명 추가 지원)에게 평균 18.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3.3만)에게 가구 평균 220만 원의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 평균 지원금액이 2021년 12.7만 원에서 2022년 18.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코로나 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한다. 만 65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생자)은 12월 31일까지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한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022.12.~2023.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4천억 원 목표, 전년 대비 340억 원 증액)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23년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중양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를 연말까지 쓸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을 12월 14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11월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2주간 연장한 것이다. 아직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연말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11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연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60대 어머니와 40대인 두 딸이다. 이들은 모두 암, 난치병 등으로 투병 중이었고, 건강보험료도 1년 넘게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방에선 어머니와 40대 둘째 딸이 각각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다. 9장의 유서에는 난소암을 투병 중인 어머니와 경련이 잦은 희소병을 앓던 40대 큰 딸의 고단한 삶 등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주민 등에 따르면 남편(아버지)은 사업부도 후 빚을 남기고 사망해 세 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이사하여 2년 넘게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 긴급복지제도가 작동되지 않았을까?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비슷하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60대 어머니의 실직과 30대 큰딸의 투병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는 밀린 집세와 공과금 등 현금 7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충했다. 소득의 상실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가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가동했다. 즉,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거나 수도가 끊기는 등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등으로 취약가구를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시민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복지급여는 가구상황,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정부가 조건에 맞으면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었다. 세입자이고 암·난치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129로 전화하거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긴급복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긴급복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가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질병 치료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가구는 129, 복지로,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어디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제는 신청주의를 바꾸거나 적극 보완해야 한다.

15세 이상 국민은 ‘보조금24’에 가입하여,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305가지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등을 확인하고 일부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보조금24’에 가입하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복지급여를 보조금24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보완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급여 신청시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

수원 세 모녀 가구는 긴급복지나 기초생활보장을 상담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었지만, 정부는 위기 가구라고 인식했다. 이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주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이나 체납하였고, 중증질환, 채무 등으

로 위키 가구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이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화성이고, 실제 거주지는 수원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방문하였지만 해당 가구가 살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이 가구는 다른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당사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복지급여를 신청하기조차 어렵다.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채권자에게 주소가 알려질 것이 두려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복지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그런 거주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월세신고제’의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정부가 실제 거주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포용해야 한다

이 가족은 세 사람 다 암과 난치병 등을 앓고 있었는데도, 병원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마저 16개월 동안 내지 못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국가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방임한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징수율은 99% 수준이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분할납부와 결손처분(탕감) 등이 있지만, 당사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가구는 140만 가구인데, 그중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가구는 100만 가구 안팎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체납→건강보험 급여 제한→체납 가산금 부과→납부 독촉 고지→재산 압류→병원 이용 제한→건강 악화→노동력 상실’의 악순환에 빠진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포용적 건강보장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위기가구가 긴급 의료비를 신청하면 1회에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몇 달 체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제한하고, 건강 악화로 숨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이란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자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궁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몸 부분(체부)과 질로 연결되는 목 부분(경부)이 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목 부분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이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다.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등이 거론된다. 그중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한 요인이다. 일찍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여럿인 경우,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궁경부암은 예방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일찍부터 정기적으로 검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즉, 자궁경부암 검진, 안전한 성생활, 금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카로테노이드, 비타민C·E 섭취, 자궁경부암 백신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그중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0.5ml 약의 근육주사를 3차에 걸친 접종이다. 1차 접종 2개월 후 2차 접종, 6개월 후 3차 접종을 한다. 접종 연령은 9~26세의 여성이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9년에 HPV 유형 6, 11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의 예방을 위해서 9~26세의 남자에게 백신 ‘가다실’ 사용을 승인했고, 2014년에 ‘가다실 9’라는 백신을 9~26세의 여자들과 9~15세의 남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 백신으로 9개 유형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5세 미만 어린이는 2번의 접종, 15세 이상은 3번 접종을 권고한다. 어릴 때 면역체계도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를 대상으로 하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접종 국가지원 대상을 13~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 연도 기준이다. 1차 예방접종 후 2, 3차 접종 일자가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첫 접종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비용이 지원된다. 이미 접종을 받았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남은 접종 횟수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은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를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백신은 두 가지이다

지원 백신은 HPV 2가 또는 4가 백신 두 종류다. 질병관리청은 “HPV 백신의 경우 4가는 만 9~26세, 2가는 9~25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연령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상 연령 확대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며 “특히 HPV 백신이 다른 백신보다 고가여서 저소득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HPV 예방접종은 연령과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이 다르다. HPV 2가 또는 4가 백신을 처음 접종한 나이가 만 9~14세인 경우, 1차 접종 기준으로 6~12개월 이내에 2차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만일 만 14세에 첫 접종을 받아 2차 접종 시기가 만 15세 이후로 늦춰졌다고 해도 접종은 총 2회로 끝난다. 1차 접종 연령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총 3차례 접종하는데, HPV 2가 백신은 첫 접종 후 1개월 후, 2차 접종 후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HPV 4가 백신은 각각 2개월 후, 6개월 후 접종해야 한다.

HPV 예방접종을 하면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구인두암, 항문-생식기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HP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감염 후 접종으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경부암은 천천히 진행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표면의 정상 상피세포에서 시작하여 미세한 현미경학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자궁경부 상피내이형성증(정상조직과 암조직의 중간)을 거쳐, 상피내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자궁경부상피내암(자궁경부

암 0기)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다시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상 상피세포에서 침윤암이 되는 과정은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한해 약 50만 건 정도 보고된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50대 여성의 80%는 일생에 한 번 가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런데, 미국 여성 중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는 사람은 10만명 당 6명 정도이고, 그중 1.5명이 사망한다.

자궁경부암은 일찍 치료하면 사망률이 낮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에 여성암발생건수는 총 115,080건이었으며, 그중 자궁경부암은 3,500건으로 전체 여성암의 3.0%이었다. 2019년에는 3,273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898명이 사망하여 여성암사망자의 2.9%를 차지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100%이지만, 발견 시기를 놓쳐 1기말일 경우에는 80~90%, 2기 초기는 70~80%, 2기말은 60~65%, 3기는 30~35%로 생존율은 떨어진다.

자궁경부암에 걸려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20세 이상 모든 여성은 건강보험으로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사도 해주세요”라고 말해, 자궁경부암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정상화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를 쉽게 방문할 수 있다.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도’로 설치되었다. 이는 고령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는 제도이다. 정부는 치매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수립했다. 중앙치매센터, 시·도에 광역치매센터,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다. 대체로 광역치매센터는 시·도에서 대학병원 등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가 직영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은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서비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하다.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내 직원에게 간단한 ‘인지검사’(치매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주민이나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치매선별검사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추천을 받으면 부담이 준다

치매가 의심되어 종합병원을 찾으면 검사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거나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로 넘어가 신경인지검사나 전문의 진료 등으로 세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그후 협약 병원에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으로 감별검사로 치매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치매가 의심되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검사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면 검사비가 사실상 무상이지만, 본인이 종합병원 등을 찾아가면 검사비를 내야 한다. 치매진단검사비의 지원은 1인당 15만 원까지이고, 감별검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까

지이다. 치매진단검사 비용의 지원은 사업연도마다 상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의 가정환경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지급될 수도 있다.

치매 검사는 치매 조기진단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전에 치매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이용한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으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노인은 2021년 말 기준으로 399만 명이고 그 중 50만 명은 치매환자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물품 제공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치매안심센터는 대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였고, 동영상 자료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최근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에게 치매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교실’과 낮에 돌봄을 제공하는 ‘치매 환자 쉼터’도 다시 문을 열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진단을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인은 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교실에 참가할 수 있고, 낮에는 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진단은 받은 노인은 등록하는 것이 좋다.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배회인식표 발급, 지문 사전등록 그리고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치매노인은 배회하는 습관이 있는데, 계속 가다보면 집이나 본디 장소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치매노인이 몸이나 옷에 인식표를 지니고 다니면 실종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문을 사전등록하면 경찰이 실종자의 신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지건강교육실, 기억키움실(쉼터), 소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치매가족을 위한 돌봄과 지원,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낮시간에 치매노인을 돌보는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주간보호센터는 오전에 아침 식사와 간단한 물리치료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활동을 진행한다. 실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사물함도 있다. 사물함에는 이름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여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치매전담 보호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기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도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기에 초기부터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면 치매 종합포털 모바일 앱 ‘치매체크’를 다운 받으면 치매 예방서비스와 치매정보, 실종노인예방서비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 초기에는 노인이 활용할 수 있지만,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북카페를 이용하면서 환자 가족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조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비슷한 고충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다 보면 정서적 공감대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한국치매가족 협회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기 전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마치지 못한 종사자와 외부강사는 이용자와 대면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최 대한 진행을 늦추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기 바란다.

치매안심센터 <https://ansim.nid.or.kr>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형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어르신이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추정 치매환자수가 90만 명을 넘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1257만 여명으로, 이중 치매환자 수 추정치는 91만 여명에 이른다. 노인인구 100명당 치매환자 수를 나타내는 치매유병률 추정치는 7.24%에 달한다. 치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4.0%로 가장 높고 다음은 혈관성 치매가 11.0%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기 때문에 치료하면 치매의 정도가 낮아지거나 완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물 치료 등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해마다 노인인구가 늘고 치매환자도 증가하면서 치매관리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가장 큰 걱정은 인지능력이 떨어진 치매환자의 ‘실종’이다.

배회감지기는 착용자의 위치추적기이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감지기를 착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다.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인 ‘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람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시에는 긴급 호출 ‘SOS 알림’ 기능도 있다. 배회감지기 종류는 팔목에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해 위치를 알려주는 GPS형,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에 깔아 놓고 밟으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매트형이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가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수급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후 상담을 거쳐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한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업무 협약에 따라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펼쳐 3106대를 보급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4억 원의 후원금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매년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데, 2년 동안 통신비도 전액 지원한다.

2022년에도 10월부터 총 2507대의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어르신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해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

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수색·수사를 통해 치매 환자가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는 지문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 실종이 우려되는 이들의 지문과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치매노인이 지문 사전등록이 돼 있을 경우 실종접수에서 보호자에게 인계까지 평균 1시간 이내지만 미등록 시에는 94시간이 걸리는 등 큰 차이가 있기에 지문 사전등록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실종 아동을 찾는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아이는 평균 52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치매노인은 잘 걸어서 아동보다 더 멀리 가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찾기 어렵다.

지문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혹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치매가족센터와 경찰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사전에 등록한다면 실종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인터넷으로 쉽게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안전드림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안전 Dream’ 어플을 사용해 기다리는 시간 없이 빠르게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문이 사진 촬영으로 간혹 인식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출소 등을 방문해야 한다. 즉, 인터넷으로 ‘안전드림’에 접속하여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해당자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한다. 사진은 최근에 찍은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로 올린다. 혹 지문 촬영이 잘되지 않으면, 보호자가 해당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찍고 사전신고증을 받는다.

사전등록을 할 때 해당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특이사항을 자세하게 입력하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얼굴 등 신체에 점이나 흉터가 있거나 평소 즐겨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면 자세히 적는 것이 좋다. 아동의 경우에 성장하며 바뀐 신체 특징과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수정해야 한다.

배회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은 인식표를 착용할 수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무사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인식표에는 개인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는데, 인식표는 어르신의 옷 등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실종사고 발생 시 인식표 번호를 조회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는 물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라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가족, 친족, 대리인 등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인식표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안전Dream <https://www.safe182.go.kr>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실종아동등록 실종아동등록 안내 상담처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대 말벌야당 신고상담

사건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종합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들이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여 가기 →

실종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문
다들 알고, 치매 없고, 장애인도 실종예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 Dream 앱도 있습니다.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 Dream 앱도 있습니다. 실종예방을 위한 안전 Dream 앱도 있습니다.

i82 실종아동찾기센터
실종아동찾기 센터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사랑의 혁신지킴이입니다.

112 실종아동찾기
실종신고 및 사건등록 신청한 내용을 조회 및 수정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9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등록신청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기능성 정신장애인, 학제장애인이 실종·학대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신청제 주체로.

실종아동등록
찾고 있는 실종아동을 조회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고내역
실종신고 및 사건등록 신청한 내용을 조회 및 수정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앱
어린이는 휴대폰입니다. 아동과 가족·사회·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 지도를 지도에서 검색하여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에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구강보건 증진 방안을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고령시대에 대비하여 치아건강을 챙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초고령화 시대,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차 계획(2017~2021년)의 추진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등 치과 보장성이 높아졌지만, 예방 진료 이용이 저조해 아동의 50%, 성인의 30%가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가 저작(씹는 행위) 불편을 경험하는 등 한계도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2차 기본계획에는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구강질환을 관리하면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각종 전신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에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고하는 식이다.

구강건강 빅데이터(문진표·검진 및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해 영유아의 충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의 주민 구강건강 등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024년까지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치과에서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으면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한다

정부는 치과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치과병·의원간 의뢰·회송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의 제도도 활성화해 ‘○○치과 보철과 의원’처럼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 2.8%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명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

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예방·보존 치료를 확대하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충치 예방과 보존에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곳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과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2022년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 보건업무를 확대한다

전국 보건소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는 6세의 ‘6’과 어금니(구치, 臼齒)의 구를 숫자화한 ‘9’를 조합해 ‘평생 사용해야 할 영구치를 소중하게 관리하자’는 의미로 매년 6월 9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구강건강 상담, 충치·치주병 예방교육,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안내, 구강보건상식 퀴즈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2차 기본계획에서 보건소의 구강 진료 업무는 축소하되 구강보건 업무는 확대하고, 구강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 구강 관리법을 실천한다

‘치아 건강’은 하루 3회 이상, 한 번에 3분 이상, 식사 후 3분 이내 소위 ‘333 원칙’을 지켜가며 칫솔질을 하고 생애주기별로 구강 관리법을 실천하면 좋다. 어린이(10세 미만)는 칫솔질의 습관 등 구강 관리 외에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필요한 경우 X-RAY를 촬영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구치의 발육 상태, 구강 및 턱의 질병까지 점검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 청소년(10~20세)은 영구치와 치아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영구치 중에서도 큰 어금니는 씹는 면에 홈이 많아 충치가 생기기 쉬우므로 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한다. 청장년(20~40세)이 치과를 찾는 흔한 요인은 사랑니이다. 누워 있으면서 턱뼈 속에 묻혀 있는 사랑니를 매복 사랑니라고 하는데,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거나 음식이 끼이고 인접한 치아에 충치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사랑니 검사를 꼭 포함해야 한다.

중년(40~65세)에는 치주염을 앓기 쉽다.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청년기 때부터 어떻게 관리해오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스케일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깊은 범위로의 잇몸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하며 더 심하면 발치한다. 노년(65세 이상)에는 여러 개의 치아를 상실하기 쉽다. 이미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거나, 치아가 하나도 없더라도 치과 검진과 X-RAY 검사는 필요하다. 때로 의치나 오래된 임플란트에 의해 자극이 지속되어 혀나

불 점막에 궤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 검진 후 적절한 치료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을 잘 마시는 것도 치아건강에 도움이 된다

수분 보충은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입 속 수분이 부족하면 구강건조증이 생기기 쉽다. 구강건조증은 침 분비가 줄어 입이 마르는 질환으로, 충치 발병 위험을 키우고 입 냄새를 유발한다. 하루 물 섭취량은 1.5~2L가 적당하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긴장되는 순간이라면 미지근한 물이 좋으며, 우유 한 잔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커피에 든 설탕, 생크림, 캐러멜 등은 당도가 높고 끈끈하기에 섭취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다. 탄산음료는 강한 산 성분과 당분이 많아 섭취하면 충치나 치주염이 생기기 쉽다. 모든 국민이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http://www.gunchi.org>

우리나라 자살률 여전히 높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되었다.

자살은 생명을 끊는 사회적 행위이다

자살의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의 원인은 복잡하고 파악이 어렵지만 염세, 병고, 신경쇠약, 실연,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는 한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며 낮은 나라로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이 있다.

자살행위의 결과에 따라, 치명적인 자살과 비치명적인 자살(자살미수)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자살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았지만, 특정인의 자살(예, 승려의 소신공양, 무사의 활복자살 등)은 찬양 받기도 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20년에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줄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과 비교하면 자살자 수는 2711명(17.0%), 자살률은 6명(19.0%) 감소했다. 자살은 2020년 사망원인 중 5위에 해당하고, 10~30대에서는 사망원인 1 위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기 위해 2019년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24.6명(연령표준 화값)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1.0명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도 국내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4.5명으로 OECD 1위라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한다

자살률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별·연령대별로는 남성과 50대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발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중 68.9%가 남자이고, 여자는 31.1%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남자가 35.5명으로 여자 15.9명의 2.2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자 수가 2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405명), 60대(1937명)가 뒤를 이었다.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해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62.6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38.8명), 50대

(30.5명) 순이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10대~30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했고, 40대 이상에서는 감소했다.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9~24세) 자살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청소년 자살자 수는 957명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고, 자살률은 11.1명으로 전년보다 1.2명(12.2%) 늘었다. 청소년 자살률은 2016년 7.7명에서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가사·무직이 더 많이 자살한다

직업별 자살자 수는 학생·가사·무직이 58.9%이고, 그 다음은 서비스·판매 종사자(10.2%), 사무 종사자(9.2%) 순으로 많다. 자살 원인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3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25.4%), 육체적 질병 문제(17.0%), 가정 문제(7.0%) 순으로 뒤따랐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경제생활 문제(31.8%)와 정신적 문제(30.2%), 여자는 정신적 문제(56.4%), 육체적 문제(15.9%)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자 자살자 중 10·20대는 정신적 어려움, 30~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높았다.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살자 수는 경기(3129명), 서울(2161명), 부산(921명) 순으로 많았지만,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충남(27.9명), 제주(25.5명), 강원(25.4명) 순으로 높았다.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으로 7월(9.3%), 8월(9.0%)에 많았고, 12월(6.9%)이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청년층 자살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정신적 문제가 주요 동기이고, 경제적 문제와 코로나19 우울감,

자살 사고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원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는 여성이 많다

자살자는 남성이 많지만, 자살시도를 하다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여성이 더 많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자(34,905명)는 여성이 60.7%를 차지해 남성(39.3%)의 1.54배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8.7%로 가장 많고 40대(15.1%), 30대(15.1%)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우울증이나 조현병, 공황 등 정신적 문제로 자살 시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목숨을 잃는 치명적 자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이 좀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자책과 슬픔에 빠지게 된다. 미수로 끝난 자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내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든지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2022 자살예방백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 책은 2014년부터 매년 발간되는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국가적 재난·위기 시기에는 국민적 단합력이 발휘돼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위기와 재난의 시기가 지

나고 2~3년 동안은 다시 증가한다는 사례 분석이 있다”고 경계했다.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나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자살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 1950년대 이래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살방지를 위한 특별상담기구나 기관들이 생겼다. 이들 상담기관들은 대부분 정신건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관련 상담원들을 두고, 고독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대개 전화를 통해 항상 대기중인 상담원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런 종류의 상담제도는 자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든지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상담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화는 365일 하루 24시간 가동되고 있기에 언제나 부담 없이 걸 수 있다. 많은 사람은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을 자살시도로 호소하고, 살기 위해 애쓰다 마지막 순간에 자살에 이른다. ‘자살’을 뒤집어 ‘살자’로 아름다운 삶을 펼쳐보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kfsp.org>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정부는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은 지정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올해는 독감이 유행할 것이다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 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겨울철 독감은 크게 줄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어린이, 임신부, 노인 순으로 맞을 수 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순으로 맞을 수 있다. 2022년 9월 21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가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즉,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실시)이다. 10월 5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 13세)와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10월 12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노인은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즉,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이고, 만 70~74세는 10월 17일부터이며, 만 65~69세는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정된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해당된 사람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 가서 지정의료기관 찾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받고,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

해 확인받을 수 있다. 노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부가 발급한 증서로 확인받을 수 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서 접종을 받는다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사항과 주의사항을 지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금기사항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이다. 주의사항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 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기도·호흡·순환기 문제와 피부 또는 점막변화(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경우이고, 계란 알레르기는 계란 섭취 후 두드러기 외 호흡 곤란, 혈관부종, 반복적인 구토 등으로 인해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이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접종 의뢰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알림터> 공지사항을 참고한다.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정부는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1도즈는 한 사람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므로 1,066만 명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일괄로 백신을 구매하여,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 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였다. 만약,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도 별도로 확보되었다.

또한,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통사업계획서에는 콜드체인 상시유지 이행계획, 창고·수송차량 관리실태, 직원 교육실시 여부 등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른 인구집단은 유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 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므로, 사업 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기 바란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예컨대 인플루엔자를 왼팔 삼각근에 맞으면, 코로나19를 오른쪽 삼각근에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

시민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까지 예방할 수 있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 위생수칙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하기,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기 바란다.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노동자는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

시범지역에 사는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어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에 독일 질병보험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였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2019년 기준)이 도입한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

시, 경남 창원시이다. 시범 운영되는 상병수당은 근로불가 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최저임금 60%)씩 지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개의 지급 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순천과 창원에는 노동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을 한 날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대상은 당초 6개 시범사업 지역 만 15세~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동일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인 거주자와 협력사업장 노동자이었던 것, 10월 4일부터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노동자(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포함)로 확대되었다.

취업자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이다.

질병·부상 발생 후 '14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10월 4일부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

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였다.

202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였고, 관계부처·노동계·경영계·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되었다. 2021년에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월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은 노동자와 가족, 사회를 위한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무엇보다도 아픈 노동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의 강화대책이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로 건강권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와 추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아픈 노동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한다.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

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야기하고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다. 아픈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계속된 입원과 치료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신규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다.

따라서,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일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서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아울러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노동자도 포함시켰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 (1577-1000), 시범사업 운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겨울철 저체온증 환자 절반이 노인이다

지난 겨울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300명이고, 그중 절반이 노인이었다.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겨울 한랭질환자 절반이 고령층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2021~2022) 한랭질환으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노인층이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지난 절기 감시체계에는 직전 절기(433명)보다 30.7% 감소한 300명이 한랭질환자로 신고됐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47.0%이었고, 남성(71.3%)이 여성(28.7%)보다 많았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0~9시)에 42%가 몰려있었다.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22.3%는 음주 상태였다. 사망자는 9명이었는데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77.7%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경북(14.0%), 경기(11.7%), 강원(9.3%), 경남(8.7%)의 신고 건수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에서 실외 활동 중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실내 및 집에서 발생한 사례도 12.3%나 됐다.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을 감시한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의료기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감시체계에는 전국 492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극심한 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한랭질환은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농어촌 주민은 저체온증이 많고, 건설업과 위생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종사자는 동상과 동창이 많다.

한랭질환자는 갑작스러운 한파가 시작되는 12-1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체감온도를 사전에 확인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심부체온(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이 섭씨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며,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

한랭질환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랭질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식손상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조심히 이송하도록 한다.

한랭질환이 발생했을 때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체온증은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거칠게 옮길 경우 심장에 영향을 주므로 환자를 조심히 대피소로 옮겨야 한다. 그다음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덮은 뒤 목과 가슴, 복부와 사타구니를 따뜻하게 해준다.

보온성을 갖춘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땀을 제거하기 쉬운 재질의 옷, 젖더라도 보온성을 갖춘 재질의 옷, 바람이나 물기를 막고 통기성을 갖춘 재질의 옷 순으로 3겹 이상을 겹쳐 보온성을 높인다. 보온과 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신체 열의 50%는 머리를 통해 손실되기에 모자나 두건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수시로 마셔야 한다. 특히 한파특보 발령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청은 이를 연속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밑으로 떨어지면 한파주의보를, 이를 연속 영하 15도 이하면 한파 경보를 발령한다.

옥외 작업이 많은 곳은 한파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뇌 심혈관질환, 갑상선기능저하, 고령자 등 민감 군에 속하는 사람은 미리 확인하여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건강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옥외 작업 시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속해서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부터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건설현장에서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절기 건설현

장 사망사고 노동자는 77명이었다. 2022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푸집 동바리(하부 지지대)가 건축물과 함께 연쇄 붕괴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약 500개 현장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때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상과 동창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동상(강한 한파로 인한 피부 동결)에 걸렸을 때는 동상 부위는 절대 문지르지 말고 물집이 생긴 경우 터지지 않게 살균 거즈를 붙인 다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동상 부위를 20~40분간 38~42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고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하는 것이 좋다. 동창(저온 다습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부 염증)이 생겼다면 따뜻한 물에 언 부위를 담가 서서히 피부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해당 부위를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유도 하되 굵지 말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민 경험·홍보 부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2020년 7월에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갱신(2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중장기적으로 전월세의 인상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주고,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 감소가 우려되며,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월세와 비아파트에 대한 정보량을 키웠지만,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내에 신고해야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에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된다.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이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

다. 가장 간단한 신고 방법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의 변경과 해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거짓신고는 100만 원, 미신고는 4만~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최근 10개월간 122만 건이 신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 8000건에서 9월 10만 4000건, 12월 13만 4000건, 2022년 3월 17만 3000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중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21%)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신고량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져 새로 계약하는 건수가 생겼고,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신고제로 관련 정보가 집적되었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임대차신고 122.3만건+확정일자 86.6만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84만 9000건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월세는 76.2만 건이었는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95.6만 건으로 25.5% 증가되었고, 같은 기간에 비아파트는 96.6만 건에서 109.4만 건으로 13.3% 증가되었다. 임대차 신고제는 확정일자 제도와 함께 정확한 주택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이유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제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은 실태를 반영한 조치이었다.

중개업계는 제도기간 1년 연장을 환영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업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제도기간 연장을 환영하였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제도 기간 1년 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공표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제도기간을 연장해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짐을 덜어낸 것”이라면서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자료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임대인들은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임대인들은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1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를 기피·누락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자진신고 유도과 신고율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뽀)를 통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기준에 부합되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모집공고를 보고 원하는 집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모집공고를 보고 본인이 가장 원하는 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은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발표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다. 입주할 주택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많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주택의 입주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의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순위 1순위는 국민기

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2순위는 청년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의 100% 이하, 3순위는 청년 소득이 평균의 100% 이하일 때이다. 또한, 소득기준과 함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입주한 청년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신청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무주택 여건’ 기준을 충족시켜야 신청하고 경쟁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는 1주택만 신청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 전부 무효처리된다.

신혼부부 주택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이고, 그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신청자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I유형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부부합산이 90%) 이하이고, 신혼부부 II유형 중 1~3순위는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부부합산은 120%) 이하, 4순위는 120%(부부합산은 140%) 이하일 때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을 보면,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고,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이다.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달라진다. 2022년 적용되는 평균소득의 70%는 1인가구 2,890,902원, 2인가구 3,875,496원, 3인가구 4,492,996원, 4인가구 5,040,566원이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소득도 올라간다[소득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경향].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으로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부모의 소득도 본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호 규모로 모집될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선정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사업자별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자별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BMC)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신청후 예비입주자가 되면 계약후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6월 24일에 공고된 ‘목포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1인 1주택을 신청해야 한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한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청년 임대주택에는 공동거주형도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집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등이지만, 청년주택은 한 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이다. 동호지정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의 주택(단독거주, 공동거주)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한다.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공고문을 읽고 신청하기 바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내집 마련’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서민·실수요자·청년이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문턱이 낮아졌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격의 80%로 확대되었고, 청년은 미래 소득이 반영되어 대출한도액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자산형성을 위한 지렛대이다

내 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모아둔 돈이 많지 않기에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필수이다.

주택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우상향’일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격의 몇 %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컨대,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년후 입주시 6억 원, 입주 3년후 7억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가격의 50%라면 2억5천만 원으로 5억 원 집을 분양받고, 2년후 6억 원, 5년후 7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2억 5천만 원 투자로 2년후 1억 원 혹은 5년 후 2억 원을 벌 수 있다. 투자 수익률이 80% 수준이다.

그런데, LTV가 주택가격의 80%라면 1억 원으로 5억 원 집을 분양받고, 2년후 1억 원 혹은 5년 후 2억 원을 벌 수 있다. 2년 수익률이 100%이고 5년 수익률은 200% 수준이다. 이자와 세금에 따라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엄청난 수익률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키운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을 부추겼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높여주는 것이었다. 주택가격이 우상향일 때는 은행이 주택가격의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어도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 처분시 실거래가가 높아져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주택매매가 과열된 지역에서 LTV를 낮추어서 가수요를 꺾었고, 주택구입으로 인한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LTV를 낮추면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소득을 창출하려는 사람은 조금 규제하더라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80%

윤석열 정부는 7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와 열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LTV 40~50%,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

되어도 최대 50~70%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자리론과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LTV 80%로 적용된다.

또한, 대출자의 소득 요건도 없어졌다.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내와 같은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이 없어졌다.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 전세를 살거나 보증금에 수십만 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은 집을 구입할 여력이 생겼다.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월세를 냈던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강화되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확대되어도 누구나 은행돈을 쉽게 빌리기는 어렵다. 정부는 가계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를 시행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즉,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2022년 6월까지 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7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되었다. 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해당 차주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미래 소득 반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DSR이 현재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청년층에게 불리했다. 일반적으로 청년은 나이가 들수록 경력을 쌓고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정하면 불합리하다. 정부는 청년층에게 대출할 때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경우 6월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7월부터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늘었다. 30대 초반은 12%에서 17.7%로 올라갔다. 연봉 3,600만 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이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미래소득이 4,237만 원으로 책정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723만 원에서 3억1,452만 원까지 늘었다. 미래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면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래 소득을 활용할 경우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장래소득 산정 시 20년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8월부터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줄고 최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확대되고, 청년은 미래 소득이 반영되어 대출한도액이 늘어도 대출받을 때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한국도 금리를 인상했다.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상품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상되었다. 보급자리론 7월 금리는 지난 달에 비하여 0.25%포인트 인상되어, ‘u-보금자리론’은 4.85%(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4.75%(40년)이다.

주택 가격이 우상향일 때, 주택담보대출은 자산형성을 위한 지렛대이다. 대출자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면 원리금과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우하향으로 바뀌면 원리금을 갚아도 주택가격은 떨어진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은 경매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의 확대는 양날의 칼과 같다. 잘 사용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도구이지만,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내 집을 빼앗아가는 흥기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공짜가 아니고, 오랫동안 대가를 치르는 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보금자리론 최대 0.35% 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4.25~4.55%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한다.

보금자리론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5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시중 금리보다 낮기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다자녀가구 1억 원) 가구가 6억 원 이하를 집을 담보대출받을 때만 허용된다. 대출한도는 3억6,000만 원이다. 특히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최대 70%이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도 오른다

보금자리론은 금융상품이기에 기준 금리가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구촌은 코로나19 상황에 풀었던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보고, 적극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에 보금자리론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 8월초 4.6~4.85%까지 올랐다. 이에 정부는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한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 보금자리론은 당초 조건이 지금보다 좋았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출한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대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3~2.5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었다.

원리금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이다.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 금액이 6억 원 초과주택은 제외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29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인상되어 대출한도가 3억6천만 원, 금리는 4.25(10년 만기)~4.55%(40년 만기)로 인상되고, 대출기간도 5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도 있다

한편,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 순자산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고 2.5억 원)를 연 2.15~3.00%(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대출받는 제도이다.

원리금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이 있다.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국고채 금리가 3.85%까지 올랐다가 최근 3.2% 정도로 안정됐고, 한국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하고, 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고채 수급여건이 좋아진 측면이 있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35%포인트 인하하게 됐다”며 “여기에 인터넷 접수 등 각종 우대금리대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또 0.1%포인트를 더 인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연말까지는 일단 동결하고, 내년엔 시장 상황을 본 후 금리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실수요자가 체감하기는 어렵다

금리 부담과 주택 거래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식은 보금자리론 수요가 금융당국의 ‘금리 0.35% 포인트 인하 동결’ 조치에도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내린 금리가 연 4.15~4.55%인데, 보금자리론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가 작아서다.

무주택자가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금자리론 40년 만기 고정금리 연 4.55%로 3억6,000만 원을 대출해 집을 구매한다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10월에 217만 원을 낸 뒤 이후 매달 약 163만 원을 내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는 월별 원리금은 최대 267만여 원이고, 최소 금액은 75만여 원이 된다. 금리가 연 2.95%이던 2021년 6월만 해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월 원리금은 약 127만 원이었다. 주택 매수 시점이 1년 늦춰진 사이 총이자는 60% 이상 불어난 격이다 보니 수요자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주택가격이 우상향이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이 이익이지만, 소득의 절반을 수십년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을 통해 25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게 금

용당국의 취지인데, 정작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있다. 연 4%대 금리를 두고 수요자마다 시각차가 있는데 정책모기지 특성상 소득 상한선이 있다 보니, 보금자리론 대상 수요자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이 탓에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수요자들에게 ‘구매력’이 현실의 벽이고, 은행 금리보다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소득 제한에 걸리는 수요자로선 보금자리론 등은 그림의 떡이다. 서울과 경기권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면, 6억 원 이하 매물은 한정적이라 수도권에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쉽지 않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준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9년 2분기 124.6에서 2022년 1분기 203.7이다. 이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택구입부담지수 100은 집을 산 구매자들이 소득의 25%를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수 200은 집을 산 구매자들이 소득의 절반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집값은 폭등하고,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꾼다

정부는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시작하였다.

최저 연 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만기는 10·15·20·30년 등 4개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저소득 청년층은 0.55%) 인하해 3.80~4.00%(10년 3.80%, 15년 3.90%, 20년 3.95%, 30년 4.00%)이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0.1% 포인트 낮은 3.70~3.90%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하지만, LTV 70%와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

등, 원리금균등 방식이고,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만 해당된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2022년 8월 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대상 주택 확인은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한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된다. 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가격평가 방법은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국민은행 시세를 우선하고, 그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시세,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 감정평가 순이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한다. 만약,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하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주택 보유 수는 신청인과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하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하다. 즉,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주택(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처분한 경우, 근로자 숙소용 주택, 20㎡ 이하의 주택, 공부상 주택이나 폐가·멸실된 경우, 무허가건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성인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 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나이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2022년 9월 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신청인이 신청해야 하고,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은 불가하다.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한도는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연간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한다. 소득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이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

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하다. 부부가 주택금융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다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정책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시기금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이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을 준용한다.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대출을 취급한다.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해지 때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청한다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은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위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와 지역농수협(제2금융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신청한다.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가격 구간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은 다르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

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자는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는 세무서나 홈텍스로 한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므로 가급적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제출한다.

본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이다. 주택도시보증기금대출 및 보증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디딤돌 대출 또는 보증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기금대출(디딤돌 대출 등)과 공사 보증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하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조건에 맞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바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중

로 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와 연계되어 있다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와 연결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흔히 나타난다. 깡통전세는 은행 대출을 통해 구매한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매자는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사기는 무리한 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는 전세가 투자의 한 수단이었다. 예컨대, 시가 8억 원의 집을 80% 수준인 6.4억 원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면, 차액 1.6억 원과 세금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내외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이 10억 원이 된다면, 집주인은 2억 원 내외로 2억 원의 매매 차액을 얻거나 자산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없더라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다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이 깡통전세일 경우,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에 집이 낙찰된다면 전세금을 손해 보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깡통전세를 가진 주택 구매자들의 파산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깡통전세 현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립 다세대주택에서 전세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 서울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3개 지역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값이 매매 가격의 88%를 넘어섰다. 특히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강서구 화곡동은 2022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서구 전세 물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값을 뜻하는 전세가율은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높았다. 서울시 평균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84.5%다. 특히 전세가율 1위인 강서구의 경우 2022년 2분기 신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96.7%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다. 청년층(만 20~34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에서는 신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89.7%이고, 송파구 전세가율은 88.2%이었다.

임차인은 전세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청년 주거권 단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는 특별히 전세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매매가의 80%라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매매가 대비 보증금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빚이 많은 집이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열었는데, 지난 한 달간 접수된 분쟁사례만 85건이 넘어간다고 한다. 전세금 분쟁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대응책으로 제기되지만 “보증보험은 미봉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전세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의 본질은 “임차인이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행하는 계약”인데, 임대인은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는 돈’이 아닌 ‘자기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증공사도 조건에 맞을 때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에 세입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주택담보 대출금이 많은 집,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피하고 보다 안전한 집을 찾아야 한다. 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작성일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이를 어기면 계약 무효”라고 써서 추가 담보대출을 막아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잘 받으려면, 종료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말하고 ‘문자’를 보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나가라고 말하면, 법원 민원과에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전입신고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소지에 남겨두어야 한다)를 가는 상황에서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경매신청서를 접수하여 임차인이 그 집을 경매받을 수도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http://www.khug.or.kr>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확정하였다.

최저임금 시급이 5.0% 인상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 9160원보다 5.0%(42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고시하였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사용자위원은 소폭 인상이나 동결을 주장하기에 공익위원이 중재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단일안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7번에 달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변동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이다.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고, 사실상 공익위원 뜻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구조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했지만 재심의를 없었다. 재심의 요청은 1988년 이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

경제단체는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과 이의제기 불수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건비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영향을 준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5%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은 높고 근로자 평균소득은 낮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현장 중간관리자 등 임금도 다 연동해 올려줄 수밖에 없다”며 “

지금도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도 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9.87%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율은 17.79%에 달한다.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역시 대기업은 529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수준인 259만 원에 그친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가격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최저임금 대응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우려한다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금 사정도 급격히 악화됐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685조 원에서 2021년 909조 원까지 뛰어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소상공인의 목소리다. 자영업자 김 모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는데 이후로 새롭게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을 포기했다”며 “다른 비품 값도 오르는데 인건비도 오르니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커진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했는데, 사용자측이 제시한 9160원과 크게 차이가 났다. 노동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해 저소득층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각국에서 화폐를 찍어 대량으로 방출하면서 집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 곡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는 크게 올랐다. 노동자들은 임대료, 식료품 값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사용자의 경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는 기술혁신과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준다. 키오스크의 도입, 무인점포와 온라인 거래의 확대 등은 한 단면일 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출생 고령사회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연계되어 생활양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가 3개월 내 취업시 최대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15~69세)에게 정부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4개월 이상 구직급여(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 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

두 가지 유형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세부적인 지원 내용도 다르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인 사람이 해당된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고, 취업경험과 무관하다.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만 받는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된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청년은 18~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 원)으로 지원받는다.

2021년에 42.3만 명이 지원받았다

2021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42.3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50.9만 명이 지원했고, 그중 83.1%가 서비스를 받았다. 지원을 받은 42.3만 명 가운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유형 참여자는 34.1만 명이었고, 그중 청년은 21.1만 명(61.9%)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한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는 이 제도로 통합되었다. 2021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201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원을 받은 사람(22.7만 명)의 약 두 배이었다.

2022년에 60만 명을 지원한다

2022년에 고용노동부는 6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중 50만 명은 저소득층·청년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I유형 50만 명(2021년에 40만 명), 그 중에서도 청년특례 17만 명(2021년에 10만 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2021년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수당과 별도로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이 지원되기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 원을 받게 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인천, 부산,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전담팀(인천·구미)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부산 등)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1명의 상담사가 초기상담부터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전담 관리했다면 취업알선 전담팀은 집중적인 취업알선이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업무에 집중한다.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 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해 월 2회 구인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 의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동영상 의무 수강 등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 등에서 구직의사를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

취업역량평가를 바탕으로 취업지도를 한다

아울러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취업역량평가를 개편해 구직자의 구직의지·역량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상담사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표준안’을 보급해 상담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참여자가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대상의 입맛에 맞는 홍보 콘텐츠상담채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시간 실시간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을 카카오톡에서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홍보 캐릭터인 ‘(취업)이름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지원대상은 이렇게 신청하기 바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국민(청년은 120% 이하)이 신청할 수 있다. 그중,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중,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참여자는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심층상담을 받고,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고용상황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www.work.go.kr/kua>

직접 일자리 106만 개가 지원된다

정부는 2022년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지원한다.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은 신청하기 바란다.

직접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관 따위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접 일자리사업은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생계안정과 민간일자리 진출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사업을 설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중 어르신 15만 명이 1월 초부터 일터에 배치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1월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2021년에 총 104만 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2022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와 방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일자리 106만 개를 지원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87만 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해 1차 통합공고를 냈고,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은 15만 명 노인이 일을 시작했고, 자활근로와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60만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군·구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중 상당수는 시·군·구와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직접 일자리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시비 약 23억 원을 투입해 동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법원·검찰청, 작은도서관 등 57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는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환경정리, 도서관 사서보조, 보장구 세척·소독사업, 장애인전용 주차계도 등 3개 사업유형에 일반형 67명, 복지 93명 등 총 175명이 참여한다. 전년 대비 참여자는 60명이 증가하고, 예산액은 8억3천만 원 증액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있다

직접 일자리는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기 쉬운 것이 많다.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이므로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정부 일자리인 만큼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중 ‘안전보건지킴이’는 55세 이상 신중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퇴직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산업안전을 지키는 안전보건지킴이는 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일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현장 경험이 있는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년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전국의 건설 현장이나 안전, 조선업 분야 중에서 안전 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중·소규모 산업(12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과 용접, 용단 등 화기사용 작업을 감시하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기술지도 실시 현장 중 고위험현장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근무조건은 최저임금이고 중식보조비로 13만 원, 복지포인트로 1회에 40만 원이 지급된다. 2인 1조로 근무하며 근무 기간은 4~10개월이다.

안전보건지킴이의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 소유자,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지침에 나온 취업 취약계층은 가점이 부여된다. 채용공고를 보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나 자격증을 희망근무지역의 공단 알선 기관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도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에 도전하기 바란다. 이 사업은 고졸 일경험 지원, 청년 특화 훈련, 전직지원 등인데, 지역 내 청년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취업연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 등이 달라서 생기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고용정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예컨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옥문화원은 ‘한옥 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장인매칭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가 공모해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했지만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자치구 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9억600만 원으로 자치구에서 대응자금 10%를 부담하며, 교육훈련, 취업연계사업, 창업·창직 지원, 샌드박스, 기타 사업 등 5개 유형

으로 추진된다. 교육훈련사업은 지역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취업촉진 사업이다. 취업연계 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에 따른 원활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 창업·창직 지원은 창업·창직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이다.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곧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할 사람을 모집할 것이다. 2021년에 서구는 ‘전통 시장 특화 창업육성 플랫폼 <양동마당>’을 추진하였다. 창업자 4명 중 3명이 양동시장에 점포를 개소하는 등 참여자 8명 전원이 취업·창업에 성공했다. 서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하는 디지털·비대면 창업모델을 중점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검색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도 신청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세요

정부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첫만남꾸러미란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을 말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태어난 모든 아동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부이다. 이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부모(혹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00만 원 이용권(카드적립금)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에게 필요한 옷, 분유, 놀이감 뿐만 아니라, 부모

가 생활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에 출생한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12개월 미만 영아는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는 월 15만 원, 12개월 이상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태어난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24개월 미만까지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보호자)가 영아수당 대신에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을 신청하면 이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육료 바우처 또는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부모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부모는 물론이고 대리인도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영아수당(혹은 아동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며칠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금은 출생신고를 할 때 영아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수당도 확인해 준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검색하여 예시된 대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출생증명서와 신고인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참여의료기관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약된 병원이다. 온라인신청은 아동을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 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출생신고를 하고, 동시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각종 복지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부24 누리집과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다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아동의 부모, 조부모,

보호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다. 다른 보호자 혹은 그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부모(혹은 보호자)가 대리인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있는 카드에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즉, 국민행복카드를 가진 사람은 그 카드로 적립금을 받고, 없는 사람은 새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담당공무원과 상의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 자녀가 있는 부모(특히 어머니)는 만들어 두어야 한다.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부채가 많은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도 있는데, 압류방지계좌는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다.

첫만남이용권은 4월부터 지급된다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은 출생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출생신고와 영아수당의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이익이다. 아울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100인의 아빠단’이 육아를 함께 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에서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할 아빠를 모집하니, 3~7세 자녀를 둔 아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0인의 아빠단에 신청할 수 있다

100인의 아빠단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네이버 카페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나 거주하는 시·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일정과 선정자 발표일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카페의 지역별 공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100인의 아빠단의 멘토 아빠 25명을 선정한다.

100인의 아빠단의 참가대상은 3~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이다. 다양한 분야의 육아 방법을 배우고 선배 아빠들의 실질적인 육아 정보를 얻고 싶은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녀 나이를 3세 이상으로 한 것은 아빠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100인의 아빠단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로 ‘함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이다. 매년 참가자를 모집

하는데, 2022년 참가자는 12기이다. 아빠들이 카페를 통해 서로 육아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육아 비법을 배울 수 있다.

100인의 아빠단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

2022년 ‘100인의 아빠단’에 참가한 아빠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육아과제와 함께 다양한 대면 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 멘토인 선배 아빠들이 매주 1회 제시하는 ‘온라인 주간 과제’는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아빠가 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과제는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게시판에 활동 내용을 공유해 활동을 인증하면 된다.

멘토 아빠는 참가자 아빠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자료로 임무(미션) 수행방법과 멘토만의 육아 방법(노하우) 등을 소개한다. 참여 아빠는 일주일간 과제(미션) 수행 후, 수행 결과를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카페) 혹은 개인 SNS 등에 게재하면 된다.

쉽게 말해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많은 선배 아빠들이 후배 아빠들에게 매주 자녀와 함께 놀이하고, 교육적 활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일상생활을 즐겁게 하며,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부과한다. 그럼, 참가자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인증(보고)하는 방식이다.

100인의 아빠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별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나누고 배우는 자리도 제공한다. 세부 내용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내 지역 게시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혹은 아빠단 운영팀(전화 070-5147-8909)에 문의하면 된다.

100인의 아빠단 카페가 운영된다

100인의 아빠단은 공식 카페를 통해 소통한다. 이 카페는 아빠단 운영사무국이 운영하고, 아빠단 참가자 뿐만 아니라 육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카페 회원끼리 유익한 소통을 위해 이 커뮤니티는 몇 가지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 사무국은 게시글 혹은 댓글을 관리하는데, 다음과 같은 글을 ‘사전 공지 없이’ 삭제한다. 즉, 광고성 스팸, 욕설, 외설적인 글,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내용; 본 커뮤니티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글(상업적 용도의 게시글); 게시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 도배성 게시물; 광고로 유입되는 부적절한 링크나 HTML 코드, 악성코드를 삽입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 카페는 회원들이 커뮤니티의 성격에 맞는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해 상식 수준에서 댓글을 달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하지만, 광고, 욕설, 카페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강제로 회원을 탈퇴시키기도 한다. 참가자들은 100인의 아빠단의 성격에 맞게, 자녀 육아와 관련된 글을 자유롭게 게시하면 된다.

카페는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처리한다

100인의 아빠단 카페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다. 커뮤니티 방문자들의 개인정보는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와 당첨 경품 발송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필

요한데, 이는 ‘비밀 댓글’ 등을 통해 수집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이벤트 경품 발송 등과 관련된 문의를 위하여 일정 기간(30일) 저장하였다가 파기하고, 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혹 커뮤니티 이용 관련 문의 사항과 불편사항은 아빠단 운영담당자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혹은 이메일 babybirth_mw@naver.com 로 알려주면 된다. 아빠단 운영사무국에서 적절한 답변을 줄 것이다.

100인의 아빠단은 호평을 받았다

100인의 아빠단은 참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0인의 아빠단’에 참가했던 ‘태준아빔’(닉네임)은 2022년 3월 7일에 카페를 통해 ‘아빠단’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아빠단에 참가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온라인 주간 미션을 올리면, 그 주에 미션을 수행하고 올리면 된다. 총 5가지- 교육·건강·일상·관계·놀이 미션으로 진행된다. 일주일에 하나씩 하다보면 연말에 보면 꽤 많은 미션들이 쌓인다. 2021년에는 전문가 미션도 추가되었다. 즉, 교육·건강·일상·관계·놀이 각각의 멘토 5명이 돌아가면서 내주는 일반 미션이 있고, 전문가가 내주는 전문 미션이 있다.

매주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게시판에 올리면, 매달 그 달의 우수 아빠를 3명씩 선정하는데, 자신은 6월, 8월, 10월에 ‘우수 아빠’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연말에 해단식을 하면서 ‘최우수 아빠’로 선정되어 상품권도 받았다고 한다. 100명 중에서 ‘최우수 아빠’로 선정되었으니 자랑할만하지 않는가?

태준아빔은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것이 “정말 좋아요”라고 평가했다. 2년 동안 한 미션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인간 인

형뽕기”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이 계속 하자고 난리였다고 회고했다. 또한, 달걀을 얼린 후 잘라서 만든 미니 달걀 후라이와, ‘육아헬스마블’도 재미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집에서 한 활동이 많았는데, 이제는 야외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2021년에 아빠단으로 활동했던 오두원(38세) 씨는 “아이가 커갈수록 아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가했다”며 “아빠단 활동을 하면서 아이와 많이 친숙해지고 유대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 <https://cafe.naver.com/motherplusall>

복권기금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한국장학재단이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기 바란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급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발굴하고,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장학생 선발 인원은 꿈장학금 1,500명, 재능장학금 500명, SOS장학금 400명이다. 꿈사다리 장학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은 학교추천과 신청이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이고, 재단 심사와 선정은 6월말에서 7월초이다.

SOS장학금은 두 차례 나누어서 시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2차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재단 심사와 선정은 1차는 4월에 완료하여 5월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2차는 9월에 선정하여 9월부터 장학금을 지원한다.

꿈장학생·재능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심사는 2022년 12월에 할 예정이고, 보완심사는 8월에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한다. SOS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은 저소득 학생이 추천된다

장학금에 따라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다.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은 기본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할 때 추천·신청할 수 있다. 기본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OS장학금은 위기에 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SOS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재학 중인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구난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급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이다.

긴급구난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주소득자 혹은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주소득자 혹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이다.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별로 학교추천 혹은 신청한다. 꿈장학금은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이다. 꿈장학금은 학교장이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재능장학금은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특화된 재능(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기타)을 보유한 학생을 학교가 추천한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제한이 없다. SOS장학금은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학교가 추천한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제한이 없다.

꿈장학금·재능장학금은 소득기준에 덧붙여 교과와 비교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꿈장학금은 직전 학년 교과기준으로 중2는 없지만, 중3~고1은 성취도 평균 D 이상, 고2~고3은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단,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미적용)일 때 추천받을 수 있다. 재능장학금도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일 때 추천받을 수 있다.

학교추천과 신청 제외되는 학생이 있다

학교추천과 신청 제외되는 사유는 사회적 물의, 이중수혜, 중복신청 등이다. 꿈장학금·재능장학금은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받을 수 없다. 이중수혜를 받는 학생도 학교추천과 신청에서 제외된다. 즉,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이다. 저소득층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된다.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은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추가서류제출기한 내 장학금포기확인서(해당 기관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여 구제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꿈장학금·재능장학금·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단, 기존 SOS장학생은 꿈장학금·재능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SOS장학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와 중복신청은 제외된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 제외된다. 같은 해 꿈장학금·재능장학금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지만, SOS장학금(2차)의 경우는 2022년 꿈장학금·재능장학금 탈락 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꿈·재능·SOS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학교를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개소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메타버스상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스마트 꿈드림 센터’에 입장하여 각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개소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상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인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열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상담, 진로탐색 등 꿈드림센터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거주 지역 내 꿈드림센터로의 연계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변에 센터가 없어 접근이 힘들거나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는 메타버스 운영 기반(플랫폼)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제페토(ZEPETO)’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은 5개의 꿈드림 공간(존)에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의 각 구역에서는 상담, 교육, 자기계발, 진로탐색, 청소년 권리 등과

관련된 과제(미션)를 수행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교류할 수 있다.

5개의 공간 중에서 ‘마음드림존’은 꿈드림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업, 진로, 또래관계 등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등을 안내한다. ‘배움드림존’은 청소년에게 학습동기강화, 검정고시, 대학입시 등 교육지원을 안내한다. ‘진로드림존’은 청소년이 진로적성검사, 진로 및 직업훈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진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재능드림존’은 청소년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기초소양교육, 건강 및 생활지원 등을 안내한다. ‘권리드림존’은 학교 밖 청소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스마트 꿈드림센터의 상담사 ‘드리미’가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과 소통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상담1388’과 유관기관으로 연계 지원한다.

꿈드림센터는 전국에서 220개소가 운영된다

꿈드림센터는 ‘꿈=드림(dream)’과 ‘꿈을 드림’(‘드리다’의 명사형)이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전국 꿈드림센터가 대면사업과 비대면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만들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꿈드림센터와 연계하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정되어 1:1 전문상담부터 학업·진로·자립 지원 등을 제공한

다. 시·도 단위에 센터가 있고, 시·군·구 단위에도 있다. 만약 거주 지역에 센터가 없다면 청소년은 인접 지역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기관이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이미 있었던 두드림·해밀 사업이 법률 제정으로 확대·변경되었다.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꿈드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경찰청 등과의 부처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연계한다(발굴·연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연계 초기에 1:1 상담지원을 통해 개인별 특성 및 욕구 파악 등 서비스를 계획한다(상담지원).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지원).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체험, 전문직업훈련(내일이룸 학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진로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자존감·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등을 지원한다(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및 급식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

성장을 지원한다. 정기 건강검진(3년 주기), 확진 검사, 출장 검진 실시 등을 실시한다(건강지원).

스마트 꿈드림센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구글플레이 앱 장터’나 ‘애플스토어 앱 장터’에서 ‘제페토 앱’을 내려받은 후에 ‘학교 밖 청소년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검색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이후 각각 나에게 어울리는 가상 인물(아바타)을 만들어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 꿈드림센터 개소에 맞춰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과제를 수행하고 획득한 가상세계 상품(월드 아이템)을 촬영한 후에 해시어(해시태그) 표시 사진을 게시판(피드)에 등록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었다. 개소 이벤트를 마친 후에도 매월 새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참여에 관련된 내용은 ‘제페토’ 게시판과 꿈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스마트 꿈드림센터’를 알리기 위해 ‘제페토’ 내 유명인(인플루언서)과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도 바뀌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은연중에 ‘문제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기에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일 것이라는 편견이 ‘문제’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 특기 및 소질개발, 가정형편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벗어난다.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경우에도, 그들의 결정 자체를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법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일 수 있다. 사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정착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었고, 근대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조선시대 말이었다. 현재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학교교육보다 재택교육(홈스쿨링)을 선호하는 청소년과 부모도 생겼다. 따라서 ‘스마트 꿈드림센터’가 생긴 것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유익한 일이다. 관심 있는 청소년은 메타버스에서 꿈드림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하기 바란다.

꿈드림센터 <http://www.kdream.or.kr>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쉼터에서 나온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 청소년 생활비도 지원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극단 선택을 줄이고자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고 예방한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높은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특성상 가족해체, 경제적 취약성 등 환경적 요인이 자살·자해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은 국내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7.7명에서 11.1명으로 44% 증가했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2천633명에서 4천459명으로 69% 급증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 수립된 자살대응책은 전 연령대를 포괄해 청소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학생 중심 대책이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용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은 자살·자해에 특화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센터마다 임상심리사 2명씩을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지원한다.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 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기존 155명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대기 없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특별 지원한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일 때이다.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보다 20% 포인트 높았는데, 더욱 높다.

은둔형 청소년과 청년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만 19~39세 은둔 청년과 그 가족도 지원하고 있다. 은둔 청년은 여러 요인 때문에 3개월 이상 가족모임이나 편의점 등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방 혹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이다. 은둔의 기준은 당사자가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은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은둔 청년 맞춤형 상담,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계, 정서지원 프로그램, 관계이해 프로그램, 취미·체험 프로그램, 사례관리와 생활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부모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온라인 혹은 시·도 청년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청소년쉼터의 자립 기능이 강화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식주제공,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여가활동지원 등 안정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청소년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쉼터 유형별 보호기간은 일시쉼터는 24시간~7일 이내,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최장 9개월), 중장기 쉼터는 2년 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에 138개소가 운영되는데, 각 지역별로 청소년쉼터의 수와 유형이 다르기에 쉼터의 입소 연령과 절차 등은 시설별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쉼

터는 초기에는 집을 나온 청소년을 일시 혹은 단기로 보호하였지만,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중장기보호와 퇴소 후 자립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이용한 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로서 입소기간 2년 이상, 퇴소후 5년 이내,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이다. 지원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보증금, 월임대료)는 시중가의 50% 이내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월 30만 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의 확대를 추진해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 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후(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경우에 당사자가 쉼터에 신청하고, 쉼터가 관할 시·군·구에 추천하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쉼터를 퇴소한 청년의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 원이고 최장 3년간이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월 35만 원(2023년에는 40만 원)씩 5년간 받을 수 있

는 것과 차별적이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했다라도 아동양육 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산 경우와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과 청소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KYCI).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개발원 소개' (About Us), '주요사업' (Main Services), '지역센터' (Regional Centers), '전차도서관' (Digital Library), '알림마당' (Notice Board),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and '재원정보' (Resource Inform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심리건강 확인하기**: A section for psychological health checks, mentioning a survey for 100,000 youth.
- 청소년안전망**: A section for the youth safety net, featuring a family illustration.
- 정책연구및 프로그램개발**: A section for policy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 mentioning a research team.
- 청소년상담사**: A section for youth counselors, mentioning a certification exam.
- 온라인입사지원**: A section for online job application support, mentioning a job portal.
- KYCI연수원**: A section for the KYCI training center, mentioning a training program.

 The footer contains four columns of information:

- 공지사항**: Notice board with dates like 2023-01-16 and 2023-01-12.
- KYCI NEWS**: News section with dates like 2023-02-15 and 2023-02-07.
- Training Schedules**: Training schedule section with dates like 2023-02-15 and 2023-02-07.
- Coaching Schedules**: Coaching schedule section with dates like 2023-02-15 and 2023-02-07.

올해 청년정책, 이렇게 시행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등을 의결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청년 대표와 청년정책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이다. 이 위원회는 전국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청년정책을 조정·분석·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에 의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짓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를 확대하며, 가족 돌봄을 하느라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청년정책 본격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청년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도 국가가 함께 돌보기로 했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21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 세대 내 격차완화,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6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천억원 증가되었다.

청년의 삶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우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여 14만 명에게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 20만 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5,000명 대상으로 3개월간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

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청년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한다. 62.5만 명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청년의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확대하고(10.4만 명) 저축액의 1~3배를 지원한다.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을 출시하여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신설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최대 1,200만 원).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천만 원에서 3.6천만 원으로 확대) 및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소득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도 지원기준 완화로 중산층 청년까지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청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성을 강화하여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기우린다.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1.5만 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하여 근거 중심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꼼꼼한 과제관리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1년 9월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조직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한편,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내실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한다.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는 기존 134개에서 90개를 추가하여, 청년세대는 청년정책의 주체이자 국정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롭게 지정되는 56개의 정부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 1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본격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

칭한다.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제 국가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정부는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 해소에 힘쓰고, 보다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역, 구직단념 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고졸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장려금(500만 원)도 지원한다. 청년정책이 계획대로 잘 구현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관련 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https://2030.go.kr>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한다

만 19~34세 사이 청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자산형성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특성에 맞춤 자산형성 지원을 2021년 1.7조 원에서 2022년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구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할 수 있다

청년은 소득 구간별로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정부 지원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은 장려금 혹은 장려이자를 받고,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 매칭한다. 만기 수령액은 청년이 낸 360만 원+정부 매칭 360~1,080만 원 합계인 720~1,440만 원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의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매칭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하는 청년:정부가 1:3이고, 차상위계층을 넘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1:1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저축원금 360만 원+정부의 장려금 1,080만 원+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만에 1,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로또’와 같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로 장려금을 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내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1년 2%)를 지급한다. 청년은 2년 만기 1,2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청년이 한 달에 50만 원까지 저축할 때 이자와 별도로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이 1년간 적금을 내면 600만 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12만 원을 받고, 2년후에는 1,200만 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금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는 예금이자와 별도로 1년에 2%, 2년에 4%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간 600만 원까지 3~5년간 가입하면, 3년후 1,800만 원+펀드수익+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청년을 정부의 각종 자산형성제도에 서 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에 가입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흔히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미혼자는 부양가족이 적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들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통장도 있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는 크게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나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통장은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나 엄격한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청년에게 적용하는 청년통장은 지원 범위나 조건이 제각각이다. 각 지자체별 청년통장 명칭도 ‘광주청년 13(일+삶)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 ‘기쁨두배 통장(부산)’ ‘청년희망 통장(대전)’ 등 명칭이 다양하다. 각 제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 소득, 자산이 다르고, 예산이 제한되어 본인이 지정 기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혹 올해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매년 그 시기에 신청을 받기에 정보를 갈무리해두기 바란다.

광주청년 13(일+삶) 통장은 참가자를 매년 모집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더해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설계돼 있다. 광주시의 ‘청년 13(일+삶) 통장’은 매달 10만 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광주광역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13통장 만기를 달성하면 ‘더드림 플러스 통장’이라는 후속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광주광역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월 소득 68만 3444원 이상 191만 1440원 이하이다.

더드림 플러스 통장은 월 10만 원을 6개월 간 저축하면 이자 17%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이자 3만 1500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8일이었다. 원하는 사람은 2023년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100%를 추가 적립하고 이자까지 제공해 주는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연 3,060만 원),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나 2년 동안,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선택해 입금하는데, 가입 기간 동안 납입액과 기간 변경은 불가하다. 매월 10만 원 혹은 15

만 원, 2~3년 저축 시 2배 금액(이자 포함) 저축이다. 만약,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는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를 뜻하며, 독립된 세대라도 필수적으로 소득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제출 서류는 없고, 만약 부모나 친지 등의 명의로 된 건물에 거주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근로소득 및 서울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신청한 기간 동안의 50%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울 거주 및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전남, 희망디딤돌 통장이 있다

전남에서는 도내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적립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디딤돌 통장’을 지원한다. 2022년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718명을 뽑았다. 신청 조건은 전남 거주 만 18세~39세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33만 원)이다. 지원 내용은 매달 10만 원씩 3년 적립 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720만 원 +이자 수령이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자신의 소득과 가구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혹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도 지원하기 바란다.

광주청년정책 플랫폼 <https://www.gwangju.go.kr/youth>

광주청년 13(일+삶)통장 <https://www.13account.or.kr>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 복지로에 신청하면 1년간 매달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이나 취업준비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즉, 청년이 (월세보증금 \times 2.5%/12개월)+월세=7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라

도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60만 원(보증금의 월세 환산율을 고려하여 7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년가구와 원가족이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에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지칭한다. 또한 청년과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한다면 모두 청년 가구에 속한다.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대상은 월 소득(상시 근로소득)이 117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월 소득에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낮다. 2022년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고,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인데, 그것의 61.1%(2022년)~58.2%(2023년)만 초과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가혹하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한시적인 소득은 소득요건 기준인 중위소

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상당해도 ‘상시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까지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 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할 수 있다. 월세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에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직계 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하숙집, 기숙사, 사택 등에서 사는 경우에 추가로 입실확인서(월세이체 증빙으로 대체) 등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화상답실(1600-0777)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자체 사업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만 해당된다.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요건(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 지원 기준이 까다롭다.

소득과 재산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살펴보기 바란다. 대체로 소득 요건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가 넓다. 예컨대, 서울시는 만 19세~39세 청년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신청하면 2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시작되며 통폐합한 곳도 있지만 아

직 별개로 신청자를 받는 곳도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으로 주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대부분 연초에 신청이 끝나 다음 해 공고를 기다려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Bokjir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and '복지신고'. A search bar is located on the right. Below the tabs, the main heading is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Detailed Welfare Service (Central)). Underneath, it says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various welfare benefits suitable for your situatio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ction titled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Youth Monthly Rent Temporary Special Support) with a subtext: '보통 139만 원가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To ease the housing cost burden for young people who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we temporarily support youth monthly rent). To the right of this text are three circular icons: '신청하기' (Apply), '문의' (Inquiry), and '자주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Below the main content, there is a table with four columns: '지원대상' (Eligibility), '서비스 내용' (Service Content), '신청방법' (Application Method), and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The '서비스 내용' column is currently selected, showing the following details: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최대 12개월) 동안 액별 분할하여 지원한다.
- 월임대금 139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만 지원하며, 임대보증금, 계약이 종료 예정 중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임대료(월년 주거급여 분담금)에 포함을 지원한 금액만 지원한다.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작업팀은 은둔·고립 청년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청년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청년정책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은둔·고립 청년을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시장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층 사회적 고립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수위 청년소통작업팀은 은둔 청년, 구직 활동 포기 청년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은둔 청년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방치되어 왔기에 인수위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부른다. 생애주기상 청년은 공부하거나 직업훈련을 하여 일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때에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은둔 청년’은 소속감이 없이 고립되기 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은둔 청년 규

모는 약 34만 명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달한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 고용도 늘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바뀌고, 사람을 덜 쓰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 사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에도 해당 업무를 할 줄 아는 경력직을 쓰고, 신규 인력을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바우처 형식의 청년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인수위가 구상한 청년 대책은 구직 활동 청년에게만 집중된 지원 정책을 확대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이 사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우처 형식의 청년도약준비금을 도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찾아갈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과 구직을 포기한 취약계층 청년에게 바우처 형식의 ‘청년도약준비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니트족을 주로 지원하되 은둔, 실직, 단시간 취업, 불안정 고용 등을 경험 중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청년도약준비금은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만 19세~34세 기간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할 작정이다.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또 받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에 비교하여 청년도약준비금은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해 청년의 삶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1년에 은둔형 청년 1만 명이 참여했을 때 일차적으로 6개월 또는 2개월을 추가해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청년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도 집행 과정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 상태인 니트족인 ‘은둔’ 청년보다는 실직, 단시간 취업, 불안정 고용 등을 경험한 ‘알바’ 청년이 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은둔’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은둔 청년의 조건에 대해 현재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법적 근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은둔’ 청년의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 경우가 많아서 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에 사회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해당 청년이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정부가 ‘은둔’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금을 주면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취업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릴 것이다.

이에 장예찬 단장은 “청년도약준비금은 현금도 일부 지급하겠지만 대부분 사회복귀 활동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1만 명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겠다. 1만 명이 문을 두드리면 엄청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1차 기준은 1만 명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청년정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예찬 단장은 “은둔 청년과 같은 분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검색·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구상한 청년정책 종합지원 플랫폼은 기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던 청년 관련 온라인플랫폼을 통합하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에서 비롯되었다. 청년의 진로 탐색과 구직 지원, 사회 교류 등을 지원하는 거점별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는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외부적 고립 상태이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는 내부적 고립 상태인 청년을 말한다. ‘은둔 청년’은 자택에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한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22년에 고립 청년 1000명, 은둔 청년 200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립 청년에게는 밀착 상담, 사례관리(생활 관리, 과정 모니터링), 자신감 회복(자기이해, 관계기술), 진로탐색(자기탐색, 진로재탐색), 취업 역

량 강화(일머리 교육, 역량강화), 지역 맞춤형 서비스(컨설팅, 소그룹 커뮤니티, 심리상담 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환경, 학교폭력, 따돌림, 취업 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경우 내적 회복에 집중하고, 소규모 ‘공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지원한다. 은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심리상담센터 등 심리상담, 대인관계 훈련 등 정서 지원, 회복 모임, 예술창작 활동, 신체활동, 공동생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고립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은둔 청년 당사자나 가족(대리인)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자립준비청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연이은 죽음에 직면하여, 사회에 나설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후보자 시절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하였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추가로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청년의 바람이 꺾여선 안 된다.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 학업, 일자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는 벅찬 현실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 열여덟 살 청년은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쪽지글만 남긴 채 학교 기숙사 밖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대학생이 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온 뒤 기숙사에서 홀로 서려 했지만,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청년이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극단적 행동을 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18세 이후에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자립준비청년’이라 불린다. 이들은 한 해 평균 이천 오백 명쯤 되는데 5년 누적 1만1천여 명 중 안정된 일자리를 구한 건 약 4할에 불과했다. 퇴소할 때 500만 원가량 자립정착금을 받고, 5년간 매월 자립수당을 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도 있지만, 보호자 없이 혼자 자립하기에는 벅찬 현실이다.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2023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였다.

2022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아동이 원하면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립수당은 8월부터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3년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

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023년에 신설된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 원)가 지원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향후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3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도약준비금(5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250만 원과 이수수당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장려금은 자립준비청

년 등 취업예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되는 것이다. 2022년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023년에는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진학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 20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립준비청년은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52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 부담을 줄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청년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올해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현장 종사자·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민간과의 협

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출신인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는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구나, 또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라고 제안했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한 청년(27세)은 신문기고문에서 “우리의 자립은 돈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힘들 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내가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아도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해줄 사회 분위기 등이 필요하다. 당사자 시각에서 이뤄지는 복합적인 솔루션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직원이 청년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시급하다.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인간적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지지를 해야 사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한부모가족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는 다양하다

한부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그 사유는 다양하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사별로 과부나 홀아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아이를 키우면 한부모가 된다. 또한, 결혼 외 관계에서 임신을 의도하지 않은 성교로 임신해서 한부모가 되기도 한다.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은 여자이고,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이다. 임신을 목적으로 혼외 성관계를 갖거나, 정자 기증을 받거나 대리모로 아이를 얻는 경우, 혼자 입양해서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가족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이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 한부모가족과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였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기준이 조금 높았다. 하지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

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였다.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정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10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 이하에서 58%로 확대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는 월 20만 원, 52% 초과 58% 이하는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8만3천 원), 시설 입소 시 생계비(가구당 월 5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 원), 자립지원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엄마 또는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쪽 부모로 이루어진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일 때 선정될 수 있다. 다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60% 이하일 때 선정되는 것보다 기준이 높다. 2022년 10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로 확대되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 이하는 월 35만원, 60% 초과 65% 이하는 월 25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자조모임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정보를 안내받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안내서에 각 분야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임신·출산 부문에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예컨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신청하면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돌봄 부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주거 부문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

원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부문에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법률 부문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종합안내서는 전자책으로 발간되었다

종합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2022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졌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되었다. 전자책은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비, 피복비, 부교재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지원금, 고교생교육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s://www.familynet.or.kr>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하세요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콜센터는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들이 해당 언어로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 등에게 한국생활 상담·정보와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의 2021년 이용실적은 19만8천 건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이용실적은 2014년 111천 건에서 2019년 155,641건, 2020년 178,452건, 2021년 198,09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상담내용은 한국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14만7천 건)이 가장 많았고(74%), 그 다음은 이혼문제·법률지원(7.9%), 부부·가족갈등 상담(6.5%), 폭력 피해(5.8%)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의와 우울증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과 2021년에는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었다. 2019년의 상담내용은 155,641건

중 생활정보에 대한 상담이 61,036건으로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상담도 적지 않았다. 이혼문제·법률지원(17.8%), 부부·가족갈등 상담(14.7%), 체류·국적과 취업·노동(14.4%), 폭력피해(11.0%), 쉼터 안내(2.4%), 국제결혼 피해상담(0.2%) 등의 순이었다.

이혼문제와 부부갈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다누리콜센터에서 이혼문제·법률지원과 부부·가족갈등 상담은 점차 줄고 있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이 가장 심각하게 호소하는 사안이다. 이혼 문제·법률지원에 대한 상담은 2019년에 27,640건에서 2020년에 22,100건, 2021년에 14,051건으로 감소하였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이 모국어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콜센터에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안이다.

이혼문제·법률지원은 부부·가족갈등 상담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상담도 2019년에 22,908건에서 2020년에 18,962건, 2021년에 12,910건으로 줄었다. 부부·가족갈등과 이혼문제·법률지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 두 유형을 합치면 2021년에 26,961건이었다. 콜센터 상담원이 하루 평균 73.9건씩 부부·가족갈등 혹은 이혼문제·법률지원을 상담한 셈이다.

한 사례로 이주여성 마오(가명)씨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 후 어려움을 겪던 중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의 도움으로 임대주택 지원과 자녀 서비스 연계 등 도움을 받고 자립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선별검사 관련 통역이 많았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별검사, 역학조사 관련 통역을 비롯하여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관련 심리·정서 상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이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는 2020년 3만9천 건에서 2021년 7만6천 건으로 급증했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방역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3자 통역과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2년에 걸쳐 약 13만6천 건을 진행하였다. 2022년 3월까지 다누리콜센터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긴급재난지원금,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문 등 총 154건을 번역하여 안내하였다.

외국인 부부의 아내 헬렌(가명)씨는 천식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대기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119 대원, 콜센터 상담원, 환자간 3자 통역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 구사일생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콜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13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05년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이 차별과 편견 없이 안정적

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의 가족정책 전문기관이다. 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인 전국 245개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센터이다. 진흥원은 이들 센터와 연계해서 가족 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 가족을 지원하거나 취약해진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다양한 가족이 차별과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사업, 한부모 가족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누리콜센터에서 운영 초기부터 8년 정도 근무해온 필리핀 출신 한 상담원은 가족갈등 상담의 경우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만으로 해결되기도 한 반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베트남 출신 한 상담원도 본인이 번역한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번역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남긴 “고맙다”는 댓글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금이나 경력에서 차별받고 있다

다누리콜센터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했지만, 직원은 70여 명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임금 등에서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다누리콜센터와 가족센터, 외국인상담센터 등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현 직장에서는 내국인 직원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별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급여가 86.8%로 가장 많고, 승진 기회(41.6%)와 경력 인정(38.2%) 등이 뒤

를 이었다.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등이 임금이나 경력 차별 시정 등을 요구했지만, 근로 환경은 되레 악화되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및 이주노동자들은 2021년 9월 27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이주여성노동자 임금차별 철폐하라”를 외치며 행진하기도 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출신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561만 원, 2,633만 원이었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428만 원의 2/3 수준이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다누리콜센터에 의지하는 빈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임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누리콜센터는 이주경험이 있는 상담원들이 출신국 언어로 입국 초기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국생활에 필요한 상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콜센터 상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상담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누리콜센터 <https://www.liveinkorea.kr>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가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지역별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와 한부모가족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 이하 가구의 임신부가 신청하면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이다.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욕구 상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한다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 원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진다. 청소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등이다. 세탁은 세탁과 세탁물 수거, 다림질 등이다. 정리정돈은 쓰레기 배출, 내부 정리, 옷장·서랍장·책장 등의 정리가

다. 취사 서비스는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등이고 장보기는 제외된다. 한편,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활동, 입주 청소 등은 제공 제외 서비스에 해당된다.

고소득자도 일부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구 구성 다변화 등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삶의 필수적인 영역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 증가해 왔다. 국가 단위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별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기에 2022년에는 서울시, 울산시, 동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기관과 인력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심사를 거친 제공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인력이 수행한다. 지정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가사서비스 제공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2.6.16. 시행)에 의거한 인증기관이다. 정부는 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내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지역공급 여건을 판단하여 영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가사관리전문가, 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 자격 취득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다.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차등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른 진입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기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100가구이며,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사 도우미’ 이용료(1회당 4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시는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막달 임신부에게 ‘가사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가 ‘광주아이키움’에 신청하면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1인 최대 20만 원(가사지원 5회, 정리수납 1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늘린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무게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에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한다

광주광역시시는 2021년 3월 24일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유선 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셔야만 한다. 지금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광주시가 외면하지 않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지원체계를 만들어내 우리 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1대1 개인별 지원을 통해 도전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꿔내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주거생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24시간 이루어진다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 2곳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각각 130㎡, 270㎡ 규모로 그룹활동실, 개인활동실, 심리안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각각 4명씩 8명을 지원했다.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지원인력 4명과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2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 행동수정을 병행하며 돌봄을 지원했다.

현재 융합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다. 이들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복지관 활동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간활동을 마친 후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지원인력 2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부터 식생활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는다. 주말·휴일에도 돌봄지원을 받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 주 1회 또는 월 1회 가정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준다

광주광역시시는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거나 폭력 성향 등으로 시설이용 거부 및 부적응으로 가족 외에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1차로 주간활동 다중지원 사업 3명, 지원주택 3명(남자), 주간활동 1인 지원 14명, 주말·휴일 돌봄 지원 20명 등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응급안전 지원,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보완 서비스도 2023년 중 개발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사는 손길이 덜 가는 장애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를 주는데, 2023년까지 대상을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늘리고, 단가를 시간당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 시작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 차감을 줄인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2023년부터 일 4시간의 단축형과 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는 일 6시간으로 늘어나고, 일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인다.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 차감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목욕, 이동,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데,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을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기회가 크게 줄기에 마음 놓고 이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을 이용할 때는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이 없어지고, 확장형 이용시의 차감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든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2022년 6만 9천 명에서 2023년 7만 9천 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을 늘리는 한편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2022년 38만 7천500원에서 2023년 40만 1천950

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2023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천 528억 원으로 2022년(2천 80억 원)보다 21.5% 늘었다.

최중증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마련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는 2023년 중에 최중증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5천 명가량으로, 전체 장애인의 9.6%다. 이 가운데 몇 명이 24시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최중증’ 기준 설정에 달렸다.

광주광역시 시범사업의 경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1만2천811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잦은 이들을 집계한 수치다.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대상자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1만2천여 명으로 놓고 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5%이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22.5%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제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나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 <http://www.bjsk.kr>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2021년에 29만 명으로 전년에 비교하여 77% 늘고, 연간 대중교통비 17만 원을 아꼈다.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 따위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카드사의 할인 혜택을 더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는 카드이다. 어떤 시민이 대중교통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한다면, 집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정류장이나 역에서 직장이나 학교로 간다. 퇴근길엔 그 역순으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걷는 사람이 많지만 자전거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알뜰교통카드 회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려는 것이다.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하여 활용한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031-427-44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Play스토어에서 ‘모바일캐시비’ 또는 ‘원패스’ 검색 후 설치한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선불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아이폰은 애플사 정책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모바일캐시비 앱 또는 원패스 앱에서 ‘메뉴’ 버튼 클릭하여 발급된 카드 번호 16자리를 확인한다. Play 스토어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검색 후 설치·가입 진행하고, 발급된 모바일캐시비 또는 원패스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대중교통 승차를 위해 출발지(예: 집)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출발’ 버튼을 클릭한다. 대중교통 승·하차 시마다, 모바일캐시비 또는 원패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꺼진 상태에서 단말기에 태그한다. 대중교통 하차 후, 도착지(예: 직장이나 학교)에서 ‘알뜰교통카드’ 앱을 실행하여 ‘도착’ 버튼을 클릭한다.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 22.8%를 아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1년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를 시작한 2021년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연간 170,064원(월 평균 14,172원)을 아껴 대중교통비의 22.8%를 절감하였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1년 12월에 29만 명으로 1년전 16.4만 명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2021년에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9회 이용하

었고, 62,226원의 요금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14,172원(마일리지 적립 9,419원, 카드할인 4,753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월 12,862원(마일리지 적립 8,420원, 카드할인 4,442원) 혜택을 받아 대중교통비의 20.2%를 절감하였던 2020년에 비해 교통비 절감률이 높아진 것이다.

젊은층과 여성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

알뜰교통카드는 젊은층과 여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교통카드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44.3%)·30대(31.6%) 젊은층의 호응이 높았다. 40대(11.9%)·50대(8.6%)·60대 이상(3.5%) 비율도 예년보다 상승하여 이용 연령층이 보다 다양해졌다.

성별로는 여성이 73.1%로 남성(26.9%)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69.7%)과 학생(15.2%)이 많이 사용하였다. 지역별로는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서울지역 이용자의 이용횟수가 가장 많고(월 40.5회), 경기지역 주민이 월평균 마일리지를 10,302원 적립하여 가장 알뜰하게 이용하였다.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평균 15,571원(마일리지 11,776원, 카드할인 3,795원)으로, 대중교통비 28.1%를 절감하였다. 이들은 알뜰교통카드를 월 평균 37.8회 사용하여 55,289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출하였다.

수도권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2021년에 알뜰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최대로 절감(금액 기준)한 이용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로 연간 417,660원을 절감하였다. 교통카드로 혜택을 많이 받은 집단은 수도권 직장인인데, 이들은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장거리를 타서 평소 교통비가 많았기에 절감 효과도 컸던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서울지역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가 월 40.5회로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걷는 시간이 긴 경기도민이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적립했다.

비수도권은 전국 평균 알뜰교통카드 이용 횟수를 넘지 못했다. 비수도권 주민은 평소 대중교통을 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알뜰교통카드를 알려 회원 가입을 늘리고 앱의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는 평균 1,050m이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출발하면서 휴대폰 앱을 켜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휴대폰으로 결제하며 도착하여 앱을 끈다. 따라서 교통카드 활용자가 얼마나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했는지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는 평균 1,050m로 분석되었다.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는 489m,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는 561m를 이동하였다.

아울러 알뜰카드 이용자 39,399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이 90.9%(매우 만족 55.6%, 약간 만족 35.3%)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94.4%가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고, 특히 57.6%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14% 증가(27.5회에서 31.4회로)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총 783억 원에 달해, 비용(마일리지 176억) 대비 편익이 약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의 교통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체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에는 적극적 홍보와 지역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지역 160개 이상(2021년 137개), 이용자 수 4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가 없는 사람은 휴대폰을 켜고 카드를 신청하기 바란다.

알뜰교통카드 <http://www.alcard.kr>

문화누리카드를 지금 신청하세요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전국 2만4천여 개 가맹점에서 1인당 11만 원까지 쓰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최소한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공익사업이다. 재원은 로또복권 판매금 등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이다.

문화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은 의식주를 챙기느라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보하기는 어렵기에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충전식 카드로 지원한다. 즉, 문화누리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하나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운영한다. 2022년에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이 투입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은 신청만 하면 11만 원 규모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 받는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는 문화누리카드 이외에 저소득가정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위한 스포츠 시설 이용료나 강좌비를 후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다.

해당 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와 나머지 가구원 등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2022년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 방식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자동 재충전이 되고 나머지만 새로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신청하지 않고도 자동 재충전되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자동 재충전 대상자는 약 170만 명으로, 2021년 약 133만 명에 비해 더 많아졌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ARS(1544-3412)를 통해 할 수 있다. 발급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선되었으니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2022년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었다.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카드사용과 잔액 확인시에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본인 인증은 다양하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센터 ARS 1544-3412로 전화하여 상담원연결(4번)이고, 잔액조회는 ARS 1544-3412로 전화하여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농협카드(주)로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전송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용내역과 잔액은 농협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2만 4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업종은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이다. 그중 문화예술은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이다. 도서는 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전자책구독사이트 등이고; 음악은 음반판매점, 음원콘텐츠사이트, 악기점이며; 영상은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영화제, 케이블TV, 위성방송이고; 공연은 공연장, 극단, 아트홀, 공연축제이며; 미술은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공예(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공예품점), 사진관이고; 문화체험은 문화예술 체험공간(문화센터, 공방), 문화재체험, 한복점 및 한복대여점, VR체험, 방탈출체험, 온라인취미클래스,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 등이다.

여행은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이다. 교통수단은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트카이고; 여행사는 관광여행사이며; 관광지는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지역축제, 체험관광, 테마파크 등이고; 숙박은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이다.

체육은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이다. 스포츠관람은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국내개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이고; 체육용품은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 판매점이며; 체육시설은 수영, 헬스, 볼링, 요가, 복싱, 탁구, 사격, 레저스포츠 등 스포츠 이용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등이다.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문화누리카드로 쓸 수 있는 곳은 다양하고 각종 할인 혜택도 있다. 영화 관람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 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적으로 운영되지만, 카드 서비스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부분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문화누리카드의 적용 대상은 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가급적 휴대폰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활용하기 바란다.

문화누리카드 <https://www.mnuri.kr>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났다.

사회서비스란?

과거 사회복지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된 복지대상이 가난한 사람에서 노동자와 가족, 전체 시민으로 확대되었다. 복지 선진국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보장을 도모한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사회서비스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 제공하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는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므로 생활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아서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와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가 더 크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가 운영 중이다.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가장 많다

사회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다. 그중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사업이 가장 많다. 영유아 발달지원은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만 0~6세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은 만 7~18세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

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만 18세 이하 정서행동장애 위험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은 만 7~15세 아동·청소년에 체계적인 비전·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노인 사회서비스가 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관련 사회서비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의 이용자는 등록장애인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세유지도구 등 보조기기 렌탈·리폼이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은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에게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토탈케어는 정신장애인 등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병행한다.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점차 시도되고 있다. 노인 맞춤형 운동은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의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해 건강증진을 꾀한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은 노인·등록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장애인의 절반이 노인이고,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장애를 동반하기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연결되어 있다.

건강증진 관련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 운동서비스는 장애인·산모(임신 3개월 이상)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시각장애인 안마는 만 60세 이상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서비스 수행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성인(청년) 심리지원은 만 18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축진을 도모한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만아동 건강관리는 만 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을 꾀한다. 비만아동 건강관리의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영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등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중산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 서비스 모델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에는 임신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일부 지역 제외)를 시행하며,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매개 심리지원사업과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 충남 천안시는 성인·장애인 재활서비스, 전북 정읍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광주 북구·광산구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새로 추진한다. 경기도는 신규 서비스 포함 총 9개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4개에 대한 시행 지역을 77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 포인트 인상하고 일부 사업은 모든 소득 구간까지 확대했다. 욕구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농어촌 주민의 복지실태를 조사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가구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3.1%)보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96.9%)을 주로 이용했다.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만 39세 이하 청년 가구(17.4%)보다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48.7%)가 높았다. 노인 1인 가구는 예방접종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았다.

청년은 자가용, 노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농어촌 주민이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편도 기준 25.8분이었다. 주로 자가용(57.8%)을 이용했는데 소요 시간은 5년 전보다 2.2분 늘었다. 그중 청년 가구는 주로 자가용(74.0%)으로 이동했으며 19.4분이 소요됐다. 반면 노인 1인 가구는 대중교통(59.5%) 이용 비중이 높았고, 소요 시간도 33.3분이었다. 대중교통의 실제 이용시간은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배차간격을 고려할 때 훨씬 더 길다. 노인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은 치료비 부담과, 병원에 가는 교통수단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이다

농어촌 주민은 질병 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치료비 부담(29.9%)을 꼽았다. 청년 가구는 치료비 부담(16.4%)보다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고 답했다.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꼽았다. 한편, 2016년 조사에서 농어촌 주민이 질병 치료 시 어려움으로 ‘치료비 부담’(32.4%)이 2013년 조사에 비교하여 12.5% 포인트 줄었으나,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라는 응답은 2배 증가했다. 농어촌 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주민이 점차 줄기에 농어촌에서 의료기관도 줄어들고 있다. 농어촌에 의원, 병원은 있더라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사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치료비 부담과 의료기관까지 이동도 문제이다. 이

에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취약지역의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등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높아졌다

농어업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년 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로 5년 전보다 1.5% 포인트,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7.3% 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5년 전 26.4%에서 30.6%로 늘었다. 그중 청년 가구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9.9%이다. 건강보험의 가입유형은 직장가입자(66.8%)가 지역가입자(33.1%)보다 높았다. 노인 1인 가구 건강보험 가입률은 89.2%로,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62.0%)가 가장 많았다.

농업인 보험 가입률은 점차 증가했다

농어가만 가입하는 농업인 관련 보험 가입률은 증가 추세이다. 2016년 농가의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16.6%, 15.2%이었지만, 2021년에는 대폭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업인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 재해에 대한 보험 급여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이 활발한 청년 가구가 농업인 보험에 많이 가입하였다. 2021년 청년 가구 가입률은 농작물 재해보험 65.2%, 농기계 종합보험 51.0%, 농업인 안전보험 14.2% 등의 순이다. 노인 1인 가구는 농작물 재해보험

16.9%, 농기계 종합보험 15.4%, 농업인 안전보험 1.9% 순이며, 농지연금 가입자는 없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인데, 노인 1인 가구의 가입자가 없다는 것은 농지가 별로 없거나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가 높았다

농어촌 주민은 복지서비스 조사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이용률은 저조했다. 복지시설 이용률은 노인복지시설(17.3%), 아동·청소년시설(16.4%), 영유아시설(14.8%), 장애인시설(5.0%) 등으로 다소 낮았지만, 만족도는 노인복지시설 72.7점, 영유아시설 72.2점 등 높은 편이었다.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7.5점이었다. 그중 청년 가구의 행복감은 62.7점으로, 노인 1인 가구(50.1점)보다 훨씬 높았다. 행복요인으로는 청년 가구가 가족(37.3%)과 경제적 안정(24.4%)을, 노인 1인 가구가 건강(69.0%)을 선택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청년 가구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가족을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듯하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1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원이 농촌지역(읍·면) 4,000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했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국가승인통계이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이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2018년에는 종합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에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2020년에 교육, 가족, 지역 사회와 공동체 등이 조사됐다. 2022년에는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졌지만, 의료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농촌진흥청 <https://www.rda.go.kr>

‘광주드림’에 게재된 이용교 복지상식

기초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다(2022년 1월 5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한다(1월 12일)

직접 일자리 106만 개가 지원된다(1월 19일)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세요(1월 26일)

문화누리카드를 지금 신청하세요(2월 9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2월 16일)

올해 청년정책, 이렇게 시행된다(2월 23일)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된다(3월 2일)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3월 9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3월 16일)

복권기금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준다(3월 23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3월 30일)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4월 6일)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4월 13일)

농어촌 주민의 복지실태를 조사했다(4월 20일)

가구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4월 27일)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5월 4일)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5월 11일)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하세요(5월 18일)
‘100인의 아빠단’이 육아를 함께 한다(5월 25일)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6월 1일)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6월 8일)
치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6월 15일)
우리나라 자살률 여전히 높다(6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6월 29일)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을 활용한다(7월 6일)
‘내집 마련’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7월 14일, 목)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7월 21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7월 28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8월 4일)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8월 11일)
보금자리론 최대 0.35% 포인트 내린다(8월 18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8월 25일)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9월 1일)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9월 8일)
자립준비청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9월 15일)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꾼다(9월 22일)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9월 29일)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아졌다(10월 6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10월 13일)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10월 20일)
정부24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0월 27일)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11월 3일)
한부모가족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11월 10일)
국민비서 가입자 1500만 명을 넘었다(11월 17일)
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개소했다(11월 24일)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12월 1일)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12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한다(12월 15일)
겨울철 저체온증 환자 절반이 노인이다(12월 22일)
나와 가족을 위한 복지상식(12월 29일)

‘이용교 복지상식’은 광주드림이 2022년 7월 14일부터 주 3회에서 5회 발행으로 바뀌면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

이용교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청소년인권 보고서(1997),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청소년복지(2004), 디지털 복지시대(2004), 디지털 사회복지학개론(2020), 한국사회복지론(2012), 한국청소년복지론(2012),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2018), 활기찬 노년생활(2020), 디지털 사회보장론(2020), 코로나19시대 복지상식(2021), 더불어 사는 복지상식(2022) 등 5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광주드림 발행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메일 ewelfare@hanmail.net

카 페 <http://cafe.daum.net/ewelfare>

이 연구는 202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나와 가족을 위한 복지상식

펴 낸 날 2023년 03월 05일

저 자 이용교

펴 낸 곳 도서출판 드림미디어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71, 2층

전 화 062) 520-8000

디 자 인 (주)테코디자인그룹 www.decodesign.co.kr

정 가 15,000원